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1~1992

1991. 12. 25.

民族統一研究院

서 문

1991년은 걸프전, 소련군부의 쿠데타와 反轉, 미국의 戰術核폐기선언, 소연방체제의 붕괴, 남북한 유엔同時加入, 남북합의서 署名, 한반도 비핵화 선언 타결 등에서 보듯이 숨가쁜 變化의 한 해였다. 그러나 1992년에도 韓半島의 統一環境面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1992년은 半世紀에 가까운 南北分斷과 對決의 構造가 청산되고 『남북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關係가 樹立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판가름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北韓의 內部事情을 보더라도 1992년은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北韓의 經濟가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은 이미 公認된 사실이지만, 經濟難 打開을 위한 개방이 權力世襲 등 체제문제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치아래 閉鎖體制를 유지해 온 북한이 邊境地域에 開放特區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1992년 중에는 일단 북한의 對外開放 幅과 方向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간의 經濟協力 可能性과 範圍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고 타 분야에서의 交流·協力增大 可能性도 판정이 날 것이며, 이러한 개방 및 남북간 교류 협력문제와 관련하여 1992년 중에는 김정일의 後繼問題 처리방향도 어떤 형태로든 可視化될 것으로 보인다.

日·北韓 修交, 美·北韓 關係改善 등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가 韓·中修交 및 南北關係 進展과 연계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북한이 核開發拋棄라는 전제조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대미·일 관계를 개선하려 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周邊情勢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도 변화하는 정세의 흐름에 順應해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주시하는 것도 필요하나, 기존의 二重的인 對南戰略·戰術의 持續 및 拋棄 與否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1991년 4월 9일 개원한 民族統一研究院에서는 위와 같은 情勢認識과 問題意識에 입각, 매년말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라는 年例報告書를 발간, 각계의 통일문제 관련 機關과 人士들에게 제공함으로써 統一環境 및 北韓情勢, 南北韓 關係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創設 初年度의 첫 年例報告書로서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 1991~1992』로 명명하였다. 前年度의 사건들을 정리, 분석한 토대위에서 新年度의 정세를 전망한다는 취지에서 年度를 연결("1991~1992")시켜 놓았으나, 문제의 성격상 1990년 이전의 사건들이 거론된 경우도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1991. 12. 25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目 次

I. 統一環境	1
1. 世界情勢	1
가. 新國際秩序	1
나. 蘇聯의 國內情勢	7
다. 유럽情勢	12
2. 東北亞情勢	16
가. 東北亞 4強間 相互關係	16
나. 東北亞 安保環境	32
3. 韓國의 主要 對外關係	38
가. 韓·美關係	38
나. 韓·日關係	44
다. 韓·蘇關係	46
라. 韓·中關係	49
II. 北韓情勢	52
1. 國內情勢	52
가. 理念과 權力承繼 問題	52
나. 經濟事情과 開放問題	55
다. 社會逸脫現象과 統制問題	60
2. 北韓의 主要 對外關係	64
가. 蘇·北韓關係	64

나. 中 · 北韓關係	68
다. 日 · 北韓關係	71
라. 美 · 北韓關係	76
마. 國際機構와의 協力關係	80
3. 對南關係	83
III. 南北韓關係	90
1. 政治 · 軍事 分野	90
가. 和解와 共存關係	90
나. 不可侵 및 軍縮問題	98
다. 核問題	101
2. 交流 · 協力 分野	106
가. 經濟分野의 交流 · 協力	106
나. 體育交流	111
다. 文化 · 學術分野의 交流 · 協力	113
라. 離散家族問題	117
3. 國際機構에서의 南北韓關係	118

I. 統一環境

1. 世界情勢

가. 新國際秩序

1989~90년 기간 蘇聯·東유럽圈의 붕괴로 전후 양극체제의 한 축이 무너진 뒤, 1991년은 唯一한 超強國으로 남은 美國이 세계질서 재편과 관련, 강력한 主導權을 행사한 해였다. 美國은 1991년 1월 핵개발을 기도하고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 서방은 물론이고 蘇聯 및 中國의 동의를 확보한 가운데 압도적인 군사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격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함으로써 美國 주도의 新國際秩序 등장을 예고하였다. 그후 구체화되어 온 美國 주도하 국제질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美國이 군사력의 상대적 우위를 견지하는 가운데 美·蘇 양 강대국이 核武器減縮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시키는 것이었다. 美國은 戰略武器減縮協商(START)을 조인(7.30)함으로써 蘇聯 전략무기의 약 50%와 자국 전략무기의 30%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어 美國은 蘇聯의 붕괴과정에서 戰略 및 戰術核에 대한 統制危機가 표면화됨에 따라 지상 및 해상배치 전술핵폐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 선언(9.27)을 통해 미·소간 전술핵폐기를 선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둘째, 과거 냉전시대에 형성된 美國 주도 안보체제의 유지를 통해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統一獨逸과 日本의 잠재력을 美國의 리더쉽안에 포용하는 것이다. 美國은 통일독일을 유럽의 기존 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잔류시킴으로써 통일독일의 향후 국제적 역할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을 관리하려 하고 있다. 또한 美國은 美·日 안보동맹의 유지를 통해 日本에 대한 美國의 군사적 리더쉽을 견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美國의 세계적 리더쉽 행사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셋째, 美國의 경제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적 경제블럭화 현상을 저지하기 위하여 美國이 주도하는 自由主義的이며 多者的인 經濟協商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다자적 무역체제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한계극복을 겨냥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유럽공동체와 아세안 등과 같은 지역경제블럭화 경향을 견제하고 이들을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체제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美國은 自國의 경제적 번영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亞·太지역과의 경제관계를 보다 유리하게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각료회의」(APEC)를 주도함으로써 다른 지역경제블럭의 閉鎖性을 견제하고 自由貿易에 바탕한 自國主導의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넷째, 美國은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와 같은 大量殺傷武器의

제 3 세계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조직화하고 있다. 1991년의 경우 美國은 이라크에 대한 응징이후 곧 北韓의 핵개발기도가 동북아의 최대불안정 요인임을 강조하면서 이의 저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해왔다. 그 일환으로 美國은 日·北韓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北韓의 핵개발완전포기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美國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특히 제 3 세계 국가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는 「地域的 非常事態」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며, 유사시에는 우세한 군사 능력과 서방의 다자적 협력을 바탕으로 그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은 1992년에도 자국 주도 세계질서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우선 美·蘇 군축과 관련하여 美國은 소연방이 붕괴함에 따라 고르바초프 前蘇聯大統領을 대신하여 기왕에 타결된 미·소군축협정을 실행할 새로운 蘇聯側 책임자들과 협정의 재확인 과정을 밟을 것이다. 이후 美國은 蘇聯의 전술핵 폐기와 전략핵무기에 대한 중앙통제 및 점진적 추가감축을 위한 외교적 압력과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美國은 蘇聯에 대한 西方의 經濟援助問題를 주요한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美國은 또한 통일독일과 日本을 美國이 주도하는 안보질서에 계속 묶어두기 위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와 美·日同盟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美國은 특히 1992년 1월 부시대통령의 日本訪問에서 「도쿄선언」을 통해 양국간의 기

존 안보상 협조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협조관계 약화요인이 되고 있는 무역마찰해소를 위한 基本合意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美國은 日本의 국제적 역할확대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유엔을 위시한 국제기구들에서 일본의 발언권강화 등, 日本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제고하는 문제에 한정될 것이며,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日本의 주둔국지원 (Host Nation Support)을 확대하는 문제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美國은 世界 貿易秩序를 개편하기 위한 주도적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美國이 상대적 강점을 갖고 있는 지적 소유권, 서비스산업분야 및 農産物분야에서 美國에 유리한 貿易條件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美國은 日本 등 주요 對美 貿易 黑字國家들과 구조조정협상(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 : SII)을 지속할 것이다. 이 문제는 1992년도 미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면서 現 美 共和黨政權의 대외무역협상 노력에 강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美國은 제3세계 핵확산 방지 및 지역적 비상사태 예방 차원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해온 北韓 核開發沮止努力을 일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核査察要求를 계속 거부할 경우, 美國은 유엔을 통한 압력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美國은 中國의 비토

권 행사 및 비협조 가능성을 예상하여 당분간은 北韓에 대한 西方의 經濟協力을 차단하는 외교적 노력, 그리고 北韓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中國의 對北韓 壓力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蘇聯의 붕괴로 美國이 유일한 군사 초강국이 됨으로써 美國은 강력한 견제세력없이 세계의 안보 및 무역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再編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지만, 이러한 美國의 리더쉽은 美國 内外로부터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脫冷戰의 여파속에서 유럽은 經濟的 統合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안보에 있어서도 유럽통합군을 창설하는 등 脫美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日本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정치적 능력과 역할의 확대를 추구함에 따라 美國이 아시아에 대한 군사력 전진배치를 축소하고 있는 현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세안(ASEAN)국가들 역시 美國에 대한 의존일변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安保·經濟協力體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 美國의 中小우방국들 내에서도 脫冷戰을 배경으로 脫美를 指向하는 民族主義的 政治勢力이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필리핀이 미군기지의 철수를 요구하는 현상에서 잘 상징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같이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환경이 美國에 새로운 기회와 더불어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세계질서 주도에 대해 더 근본적인 도전요

인이 되고 있는 것은 美國 경제력의 相對的 弱化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美國 내부에 상당한 孤立主義的 傾向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탈냉전으로 인해 美國의 강점인 軍事力의 효용은 감소된 반면에 세계질서 주도에 긴요한 경제력에 있어서 美國은 상대적 쇠퇴를 겪고 있다. 대외 무역적자의 누적과 아울러 방대한 財政赤字는 세계질서주도권 행사에 필수적인 豫算確保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이미 스스로 결정한 25%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삭감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民主黨이 多數派를 구성하고 있는 議會內 상당수 의원들은 냉전시기에 팽창되었던 國防豫算을 대폭 삭감하여 國內經濟再建과 사회복지예산에 충당함으로써 美國力의 內實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개진하고 있다.¹⁾ 이에 따라 美國의 군사력 전진배치축소와 대외 군사 및 경제원조삭감압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蘇聯의 정치 및 경제안정을 돕기 위한 서방의 경제협력재원의 대부분은 美國 이외의 다른 나라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美國은 국제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군사력

1) 1991년 5월에 실시된 美國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장래에 가장 심각한 위협에 대하여 蘇聯으로부터의 軍事的 威脅이라고 간주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0%에 불과한 반면, 日本으로부터의 經濟的 威脅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전체의 72%에 달했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Japan~U. S. Relations: A Briefing Book," November 1991, p. 83). 이것은 미국의 資源의 보다 많은 부분을 국방예산으로부터 국내경제 재건에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내 여론과 政治勢力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示唆하는 증거의 하나이다.

전진배치와 이에 바탕한 적극적인 대외개입정책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의회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半孤立主義(semi-isolationism)的 경향으로 향후 美國의 세계적 역할은 재조정될 것이다. 美國의 헤게모니적 리더쉽이 약화될 때, 유럽의 안보 및 경제블럭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동북아에서 日本의 군사·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여부의 판단은 다소 장기적인 전망에 속하나, 1992년 대통령선거 결과가 美國내 國際的 介入主義와 半孤立主義間의 향후 역학관계를 전망하는 척도로 될 것이다.

나. 蘇聯의 國內情勢

고르바초프 등장(1985. 3) 이래 추진되어 온 페레스트로이카에 따라, 소련의 국내정세는 政治的 民主化로 사회가 다원화된 반면 경제적 성과는 부진하였으며 다양한 정치조직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대립되어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蘇聯의 국내정세는 신연방조약 체결, 보수쿠데타의 발발과 실패, 발트 3국의 독립, 「독립국가공동체」 창설 등 심각한 국내정치·경제·군사적 危機를 노정하였다.

軍부와 KGB를 중심으로 한 강경 보수세력은 고르바초프의 일방적인 군병력 감축과 국방비 삭감,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개혁파의 득세 및 러시아공화국내에서의 공산당 활동규제 포고령(7. 20), 미소정상회담(7. 30~31)에서의 軍需産業의 民需로의 전환 합의, 연방 및 강경보수

세력의 권력약화를 의미하는 新聯邦條約 체결 예정(8. 20), 그리고 경제의 지속적인 악화 등에 불만을 품고 8월 19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쿠데타세력의 준비 미비와 국민의 지지 획득 실패로 쿠데타는 불과 3일만에 霧散되었다. 보수쿠데타는 결국 고르바초프의 권력 약화와 엘친의 부상, 그리고 발트 3국 등 분리주의적 공화국의 탈소독립 요구 강화 등 연방권력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결국 발트 3국의 연방이탈을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쿠데타 실패 이후 蘇聯 인민대의원대회는 新聯邦條約 체결 시까지의 「과도기 국가권력의 구성에 관한 법률」을 채택(9. 5)하여, 과도체제로서 聯邦最高會議, 國家評議會, 共和國間 經濟委員會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聯邦을 유지한다는 구상하에 新聯邦條約 초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공화국간의 상호의존적 경제구조를 보완할 연방차원의 경제조정을 강조하면서 공화국간 經濟共同體協定 체결을 모색하였다.

한편, 소연방은 발트 3국 독립후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크 공화국의 독립요구와 공화국내 소수민족들의 독립공화국 구성 또는 독립에 직면, 上記 共和國들을 제외한 7개 공화국들과 연방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헌법을 폐지하고 「주권국가연방」을 새로이 구성한다는데 잠정합의(11. 14)하였다. 그러나 신연방조약은 문안조정을 위한 7개 공화국 대표회의에서 연방과 공화국간 권한배분 문제에 관한 이견으로 假調印이 보류(11. 25)되었다. 우크라이나

가 독립여부를 묻는 국민투표(12.1) 결과에 따라 독립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자, 우크라이나 없는 소연방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와의 협상을 통해 슬라브계 3공화국간 「독립국가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선포하였다. 이어 소련내 각 공화국들도 유럽공동체형태의 독립된 주체로서 러시아 주도의 「독립국가공동체」에 합류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聯邦解體 危機가 고조되면서 각 공화국들은 國防委員會와 國防部를 신설하여 독자적인 치안유지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自體軍隊 創設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약 45만 병력의 독자군을 창설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10.5)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 벨로루시 등 4개 공화국에 分散·配置되어 있는 核武器에 대한 관리문제가 美國 등 西方國家들의 심각한 憂慮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각 공화국들의 군대창설 움직임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향후 소연방이 「독립국가공동체」로 될 것을 예상할 때, 소련내에서는 각 공화국별 독자군대가 창설되고 聯邦軍의 역할과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집단안보체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핵무기보유 공화국을 포함한 11개 공화국이 「집단안보조약」을 체결(11.29)하여 집단안보체제 형성과 핵무기 중앙통제에 합의하였고, 「독립국가공동

체」도 “舊소련이 조인한 조약과 협정으로 인한 국제적 의무의 수행, 핵무기 일원관리 및 불확산을 보증한다”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결국 1992년 소련에서는 「독립국가공동체」가맹공화국들이 집단안보체제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공동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 核武器를 統制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련의 外交權과 관련, 1991년 하반기 소연방 外務部가 對外關係部로 개편되고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사임 11개월만에 대외관계부 장관으로 재기용(11. 19)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방권력의 약화와 함께 중앙기구의 외교권은 점차 축소되어 核武器 등 연방 공동문제에 관한 對外交涉 役割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對外經濟問題에 관해서는 각 공화국 외무부가 독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亞細亞政策에 관한 외교업무는 대부분 러시아共和國으로 移管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련은 聯邦解體로 인한 國內情勢의 불안정과 經濟破綻 및 對西方 依存度 深化로 1992년에는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제면에서 고르바초프는 1991년 1월 3일 15개 공화국과 경제협정에 합의하고, 시장경제화, 사유재산 인정, 기업의 자유화, 외국인투자 자유화 등의 체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技術落後와 生産性的의 沈滯로 1991년도 1/4분기 국민총생산은 전년대비 8% 감소하였으며, 대외무역액도 3분의 1로 감소되었다(소련국가통계위원회, 4. 19). 곡물생산은 1990

년 2억 1천 9백만톤에서 1991년 1억 5천 7백만톤으로 격감되었고, 우크라이나 등 주요 곡물생산 공화국의 보호주의와 수송·저장시설 미비를 감안할 때, 식량문제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빵과 육류에 대한 배급제가 실시되고 미국 등 서방측이 대소 식량지원에 합의하고 있으나, 1992년에도 식량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쿠데타 실패 이후 개혁파가 집권함에 따라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실라예프와 야블린스키 등이 경제정책 입안의 핵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急進的 經濟改革案이 모색될 가능성이 크며, 이미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物價·賃金 自由化, 강력한 私的 部門 형성, 통일된 금융·통화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급진경제개혁계획」을 발표(10. 28)한 바 있다. 또한 슬라브계 3개 공화국이 12월 8일 합의발표한 「경제정책조정」에 관한 성명은 3개 공화국이 銀行同盟을 체결하고 루블 通貨를 공화국간의 결제수단으로 하는 한편, 개별 共和國에는 獨自貨幣의 發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면에서는 러시아 공화국을 주축으로 하는 유럽공동체와 같은 형태의 經濟協力體制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립국가공동체」를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공화국은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1992년에 價格自由化 실시, 모스크바내 상점들의 完全民營化, 自由經濟地域 추진을 위한 블라디보스톡港의 開放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연방정부의 재정상태가 破綻에 직면하였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

한 株式 및 外換市場, 金融制度의 수립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서방측의 대규모 경제지원이 없는 한 소련의 1992년 經濟事情은 올해보다 더 惡化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소 연방의 해체를 대신하여 共和國들간에 새로운 協力關係가 確立되지 않는 한 소련의 경제재건은 불가능할 것이며, 새로운 政治體制 속에서 急進的 經濟改革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가 시적 成果를 거두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된다.

다. 유럽情勢

유럽공동체(EC)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세 계질서 재편에 대응하여 국제정치경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새 로운 「범유럽주의」(Pan-Europeanism)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도 대내적으로 정치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외적으 로는 獨逸統一, 바르샤바조약기구 해체(7.1), 소련의 급속한 영향력 상실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럽질서 구축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985년 룩셈부르크 정상회담에서 1992년말까지 유럽시장 단일화를 목표로 「單一유럽法案」(Single European Act)이 채택된 이래 추진되어온 유럽시장 단일화계획은 91년 중 市場單一化에 필요한 항목인 「시장통합백서」상의 282개 항목중 75%의 작업달성율을 보였고 12개 회원국들에 의한 國內法令

정비계획도 71%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유럽공동체 12개국과 유럽自由貿易聯合(EFTA) 7개국은 1993년 유럽시장 통합과 함께 양기구간의 貿易障壁을 철폐함으로써 유럽經濟圈(EEA)을 創設하기로 합의(10. 22)하였다. 또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정상회담(12. 9~10)에서 회원국들은 單一通貨導入, 유럽中央銀行 設立 등 경제통합과 共同外交安保政策 및 共同社會政策 樹立 등 정치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 통합조약에 합의하였다. 이 조약은 1993년 시장통합을 확인하고, 通貨統수를 1997년, 늦어도 1999년 말까지는 실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92년에 유럽공동체는 우선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마무리짓고, 域內國家간 經濟協力을 강화하는 한편, 域外國家에 대해서는 通商壓力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東유럽國家들의 유럽통합 참여 노력과 관련하여, 유럽공동체는 독일·프랑스·폴란드 外務長官會議(8. 29)를 통하여 모든 東유럽국가들을 유럽공동체 準會員으로 가입시킨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으므로, 향후 경제통합을 全유럽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안보문제와 관련하여, 獨逸統一과 바르샤바條約機構 解體 등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유럽에서의 美國 영향력의 상징인 北大西洋條約機構의 존재이유가 없어졌고, 현 유고사태에 대해 유럽安保協力會議(CSCE)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럽의 독자적인 防衛

體制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미테랑 프랑스大統領과 콜 獨逸首相은 서유럽동맹(Western European Union: WEU)을 유럽공동체내에 편입시켜 유럽 共同防衛體制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서유럽동맹의 안보기능 수행을 위해 獨佛統合軍을 중심으로 한 유럽獨自軍을 創設한다고 발표하였다(10. 16). 이러한 서유럽동맹을 통한 유럽공동체의 공동방위개념은 마스트리히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통합조약에 명문화되었다. 또한 동유럽국가들도 소련주둔군의 철수('91. 6 헝가리 체코 주둔 소련군 완전철수)와 바르샤바조약기구 해체, 코메콘 해체(6. 28)로 야기된 中·東 유럽에서의 經濟的·戰略的 眞空狀態 속에서 경제발전과 안전 보장을 위해 서유럽에 의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헝가리 정상회담(10. 6)에서는 유럽공동체로의 경제통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한 안보 보장이 강조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유지기반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약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유럽독자군 창설 구상에 반대하고 있다. 英國과 이탈리아도 蘇聯과 東유럽의 불안정한 국내사정을 이유로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 미국과의 연계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유럽동맹을 유럽안보의 초석으로 하자는 유럽獨自防衛構想은 미국의 반대와 구체적 실현에 관한 회원국들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1992년에 獨佛統合軍 창설

이외의 큰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1992년에 유럽안보협력회의도 실질적인 안보장치 역할을 담당할 만큼 강화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미국은 상당기간 유럽에서 北大西洋條約機構를 통한 영향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마 北大西洋條約機構 頂上會談(11. 7)에서 나토會員國과 舊바르샤바조약국 및 발트 3 국을 포함하는 「북대서양협력회의」(NACC) 개최가 의결되었는 바, 미국은 이 기구를 통하여 동유럽 안보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한편, 1991년 동유럽 정세는 政治民主化와 市場經濟改革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보였다. 모든 동유럽국가에서 적극적인 市場經濟政策 추진, 輸出 增加, 私企業 발전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赤字企業 倒産에 따른 失業, 가격자유화 및 정부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物價暴騰, 생활수준 하락, 공업생산성 저하, 경기침체, 貧富隔差 深化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經濟危機는 政治的 不安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에서는 政治·經濟改革 문제가 民族問題로 발전하여 슬로베니아共和國과 크로아티아共和國이 독립을 공포하였으며, 민족전쟁이 발발(6. 27)하여 聯邦解體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동유럽국가들은 1991년의 경기침체를 시장경제개혁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992년에는 私有化와 市場經濟導入을 加速化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1992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은 계속될 것이며, 기업의

사유화 확대로 失業率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IMF 추정)되므로 경제위기를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1992년중으로 시장경제개혁이 많이 진전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유럽공동체 準會員國으로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공동체의 對東유럽 經濟援助가 증대되고, 1991년 4월 15일에 창설된 유럽復興開發銀行(EBRD)도 본격 가동될 것이므로 동유럽 경제는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내란중인 유고연방의 해체가 보다 구체화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소연방의 붕괴에 영향을 받아 동유럽 내에 民族問題로 인한 混亂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92년 6월로 예정된 총선거를 전후하여 슬로바키아의 독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 東北亞情勢

가. 東北亞 4強間 相互關係

(1) 美·蘇關係

美·蘇關係는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평화이니셔티브 이후, 1991년 들어 본격화된 戰略·戰術核 및 재래식 군축, 1991년 1월 걸프전 및 그 이후 중동문제 등 지역분쟁해결과 관련한 상호협력, 1991년 7월 미·소 정상회담에서의 양국간 經濟關係 정상화와 미국의 對蘇經協약속 등으로 급속히 개선되어 왔다.

美國은 동북아에서 기존 동맹체제와 前進配置戰略, 그리고 일정수준의 戰略核 및 空軍用 戰術核에 바탕한 核抑止戰略을 유지함으로써 소련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견지하고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되, 蘇聯의 현재상황을 활용하여 동북아에서 보다 안정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별적인 군축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한편 蘇聯의 解體로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른 러시아共和國은 국내경제문제해결에 필요한 서방의 經協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무기와 재래식무기감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미국은 제네바에서 소련과의 군축회담을 지속한 결과 타결된 전략무기감축협상(7. 30)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자신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蘇聯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ICBM)의 감축을 유도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소련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의 長期化는 한편으로 美國의 對蘇警戒를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으나, 양국간 核軍縮의 가속화를 통해 소련핵무기의 미국안보에 대한 威脅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다. 단 미국은 자신이 強點을 갖고 있는 海上配置 戰略核武器(SLBM)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군축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戰略核에 관한 한 가까운 장래에 美·蘇間의 대폭적 軍縮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략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소련 전략핵무기체계

에 대한 統制強化를 위한 兩國間 協의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베이커 美 國務長官이 1991년 12월 14일 소련을 방문해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을 비롯한 각 공화국 지도자들과 이 문제에 관해 집중 協의하였으며, 이는 소련 핵무기의 통제문제가 현재 미국의 최대관심사임을 말해준다. 특히 蘇聯邦의 解體로 인한 소련 국내정세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소련 핵무기체계에 대한 효율적 안전 관리문제는 1992년에도 미·소간 주요 외교현안으로 남을 것이다.

1991년 미·소양국은 정상회담(7. 30)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합의한 바 있다. 이 회담에서 美國은 첫째, 소련에 最惠國대우(MFN)부여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둘째, 미국은 소련에 대한 무역신용보증의 上限을 철폐하였다. 셋째, 소련의 IMF 등 국제금융기관 參與를 미국이 지원하기로 하였다. 넷째, 美·蘇間 租稅 및 投資條約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양국간 경제교류 및 협력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소련의 정치·경제의 불안정 상황은 미국의 실질적인 對蘇經協에 가장 근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소련의 경제재건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제정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련에 대한 서방국가들간 多者間 經協을 조직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1992년 미·소간 경제관계는 주로 이와 같은 西方內 對蘇經協을 위한 다자간 協의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미국은 또한 자신이 동북아정세에서 최대의 불안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北韓 核開發問題와 관련하여 소련의 對北韓 압력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1992년에도 지속할 것이다.

(2) 美·日關係

美·日間 군사안보관계는 양국에 공통된 군사적 위협이었던 蘇聯圈이 지난 몇년간에 급격한 변화를 보임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 사실이다. 이점은 소련에서 1991년 8월 보수강경파 군부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특히 현저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美·日간 군사동맹체제는 그 존재의의가 상당부분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美國은 향후 세계질서에서 주도적인 위상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日本의 軍事安保 및 經濟的 協調가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美國은 1991년 하반기부터 美·日 관계 재정립을 겨냥한 새로운 선언을 준비함으로써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美·日간 동맹체제의 안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탈냉전과 美國經濟力의 상대적 弱化 및 日本經濟力 擴大라는 새로운 東北亞環境에 적응하기 위하여 모색되고 있는 美日간 役割再調整은 우선 日本自衛隊 역할의 國際化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체니 美 國防長官은 1991년 5월 26일 “독

일군은 나토지역외의 분쟁개입을 금하고 있는 규제에서 풀려
 나야 하고 일본 자위대도 보다 광범한 역할수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독일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에 관한
 미국의 희망을 피력했다. 이러한 미국의 희망은 1991년 걸프
 전 이후 일본자위대의 掃海艇 파견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되었
 고, 이어 일본자위대의 平和維持軍(PKF)참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로 나타났다.

미·일간 역할 재조정은 또한 양국이 세계적 동반자관계
 (global partnership)를 정립하여 「經濟 및 安保를 포괄하는
 綜合的 協力關係」를 구축해야 한다는 미국의 구상에도 반영
 되고 있다. 이 구상은 일본이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정치적
 역할확대를 추구하는 것을 미국이 부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일본의 국제적인 政治的 位相 提高를 지원하는 대신,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일본의 讓步를 확보하는 방향
 에서 양국간 경제마찰을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및
 동북아 차원에서 安保, 經濟, 政治分野에서의 美國 리더쉽行
 使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경제·재정적 협조확대를 도모하려
 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美國은 日本을 「敵國」으로 규정한 유엔헌
 장내용을 수정하는 등 일본의 국제적 지위의 象徴的 提高, 유
 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 일본의 정치·경제적 발언권 강
 화, 世界의 主要懸案 처리과정에서 일본과의 협의 및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등과 같은 政治的 役割擴大를 지원할

것이다. 그 대신 미국은 양국간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일본에 대한 구조조정협상과 관련 일본의 양보와 협조를 촉구하고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의 주둔국지원, 즉 일본의 방위비분담 증액을 확보하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구상에 따라 양국은 1991년 1월 일본이 미국에 대한 주둔국지원을 매년 10% 늘려 1995년까지 향후 5년간 170억달러에 이를 때까지 증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²⁾ 아울러 美國은 세계 개발도상국들 및 소련을 포함한 기타 경제취약지역들에 대한 「外國援助計劃」(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과 관련, 日本의 보다 적극적인 寄與를 으로 전망되는 소위 「도쿄宣言」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의 리더쉽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日本의 分擔을 늘려 보려는 것이다.³⁾ 이러한 것들이 곧 미국이 말하는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될 것이다. 1992년 1월 초 부시 미대통령의 일본방문시 양국 頂上會談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소위 「도쿄宣言」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미·일관계발전구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2) 이 액수는 1995년에 이르면 주일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유지비용전체의 73%를 일본이 부담하게 됨을 의미한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Library of Congress, "Allied Burdensharing in Transition: Statu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October 25, 1991, pp. 8, 78.

3) Ibid., p.8; 일본은 1989년 현재 89억 7천만달러에 달하는 공식개발원조자금을 제공했으며 이것은 전년대비 3배 증가한 것이다. 일본은 이 액수를 자국 GDP의 0.7%수준으로 올리는데 이미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최근 日本의 軍事大國化 경향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환기시키려 하고 있으나, 미국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정치적 역할 확대와 經濟的 寄與 增大 이외에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美國은 1987~88년 무렵까지는 소련의 위협을 이유로 일본 군사력의 확대를 촉구했으나, 현재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방위역할을 「1千海里 防衛」에 한해서 지지하고 있으며, 자위대 군사력의 양적 팽창은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自衛隊의 평화유지군 參與도 2,000명 이하의, 엄격히 비전투적인 상황에만 한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核強國化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일본이 獨自安保論을 제기하면서 軍事力膨脹을 도모할 경우 미국의 반발을 살 것이며 兩國間 同盟關係에 균열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이 탈냉전의 상황에서 미국 및 동북아 주변국가들의 警戒心을 촉발하면서까지 가까운 장래에 軍事大國을 지향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그러나 미·일 양국간 經濟 摩擦이 급격히 심화되거나 美國의 軍事力撤收가 의외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일본의 독자적 軍事大國化가 현실로서 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日本은 지난 1년간 北韓과의 관계개선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으나 北韓의 國際核査察 거부문제로 양국간 관계진전이

어려웠다. 이는 美國이 日本에 대해 北韓의 核査察受容없는 양국간 관계개선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2년에도 이점에 관한 한 美·日 양국은 근본적 합의를 바탕으로 北韓에 대한 核査察受容압력을 지속할 것이다.

(3) 美·中關係

中國內 인권상황과 中國의 제3세계에 대한 무기수출 그리고 무역불균형 문제 등에 의해 1991년 美·中關係에서는 긴장이 지속되었다. 그 중에서도 天安門事件 이후 중국내 인권상황은 미·중관계를 경색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美國 議會와 人權團體들은 중국의 이러한 정책을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비난하였고, 동구와 소련사회주의 붕괴 이후 체제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中國政府는 이와 같은 美國의 비난을 중국사회주의 체제붕괴를 겨냥한 「內政干涉」이라고 반박하였다. 베이커 美 國務長官의 방중시(11. 15~17)에도 인권문제를 둘러싼 미·중간의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천안문사태의 주동자를 석방하도록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을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인바, 중국이 인권문제에 대한 美國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1992년에도 이 문제를 둘러싼 美·中間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리비아 등에 대한 중국의 무기수출은 미국의 地域紛爭 해결노력에 장애가 되고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

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여, 미국은 중국의 무기수출 정책을 비난해 왔다. 중국의 무기수출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식한 중국은 1989년 이후 손상되어 온 자신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이후 일본수상의 중국방문(8. 10)과 베이커 美·國務長官의 中國訪問(11. 17)時에 「核擴散禁止條約」 가입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은 1992년 상반기 중으로 「核擴散禁止條約」에 가입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정책에 부합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무기수출 문제는 중국의 국내경제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무기수출 억제를 조건으로 미국에 경제지원을 요구하고, 미국과 서방의 臺灣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를 보장받고자 할 것이므로 계속 美·中間 갈등의 소지는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권상황과 불공정무역관행 등을 이유로 한 美國의 對中 最惠國待遇 갱신문제와 시장개방요구를 둘러싼 경제마찰도 미·중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 상원은 중국의 불공정무역관행 시정 등을 전제조건으로 1991년 1년동안 중국에 최혜국대우를 연장(7. 21)해 주었으나, 1991년 중국의 對美 貿易黑字가 1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1992년에도 이 문제가 양국관계에 있어서 현안으로 남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美·中間에는 1992년에도 인권문제, 무기수출 문제, 무역불

균형 문제 등 세가지 현안문제가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바, 미·중관계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中國은 경제개혁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미국도 북한의 핵개발 저지 등 역내질서 유지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일부 반체제 인사를 석방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등 성의를 보일 경우, 1992년에도 미국이 중국에게 최혜국대우를 연장해 줄 가능성은 있다.

(4) 日·中關係

1991년 일·중 양국은 나카야마 일본외상의 방중(4. 5~7), 錢其琛 중국외교부장의 방일(6. 25~28), 가이후 일본수상의 방중(8. 10~13) 및 鄒家華 부총리의 방일(10. 14~17) 등을 통해 友好와 協力關係를 지속하였다. 특히 1991년 8월 10~13일 가이후 일본수상은 天安門事件 이후 서방선진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일본이 서방의 대중국 제재조치를 완화해 주도록 요구하는 등 中國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일·중간 무역불균형의 시정, 자본·기술 제공, 對중국 직접투자 확대 등에 대해서도 중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日·中 양국은 11월 12~13일 동경에서 개최된 「경제협력회의」에서 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에 관해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경제

적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일·중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양국간 경제협력은 1992년에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협력추구 추세와는 달리 日·中 양국은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갈등과 협조의 소지를 동시에 안고 있다. 1991년 일본의 페르시아만 소해정 파견(4. 26), 유엔평화유지협력법안 통과(11. 27 중의원 기습통과) 등 日本 自衛隊의 해외파병문제에 대해 중국이 우려를 표명(11. 29)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현대화건설을 위해 일본의 자본 및 기술 도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 노력을 표면적으로 견제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中國이 가이후 日本首相에게 「核擴散禁止條約」에의 가입을 천명하고, 兩國이 域內安定 유지에 협력할 것을 역설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992년에도 중국은 일본의 政治·軍事的 膨脹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 때문에 대일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련의 체제변화와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체제 몰락이 중국의 체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온 中國은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변화를 환영하고 지원하였던 日本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는 日·中 양국관계에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2년 日·中 양국은 소련의 변화에 따라 域內에서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불안요인에 대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992년 1월 3일 와타나베 일본외상이 中國을 방문하여 北韓의 核武器開發 등 域內 현안을 중국과 협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일·중관계정상화 20주년을 기념하여 楊尙昆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9월 예정)과 아키히토 일본국왕의 중국 방문 등 양국지도자간 활발한 접촉이 예상되고 있다. 양국간 이러한 접촉의 증대는 쌍방간 우호와 협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5) 日·蘇關係

1991년 일·소관계에 있어서 최대 懸案은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쿠나시리(國後), 에토로후(擇捉) 등 北方領土 返還問題였다. 1991년 4월 개최된 일·소 頂上會談(4.16~19)에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양국간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1년 8월 소련의 보수쿠데타 실패후, 발트 3국이 독립하면서 북방 4개도서 반환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던 保守派와 軍部の 압력이 약화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일본의 대소 경제지원을 획득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에서 소련은 北方領土 반환 등 일·소 관계 개선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특히 聯邦政府 및 북방4개도서 관할 공화국인 러시아共和國 政府에서는 북방4개도서 반환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나카야마 日本外相의 訪蘇(10.14~15)

시 고르바초프는 齒舞, 色丹 2개도서 반환을 시사하고,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은 북방영토문제 해결 5段階案을 2000년까지 단축 실현한다는 목표로 영토반환 교섭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北方領土問題 해결과정에서는 양국의 國民感情, 名分, 일본의 對蘇支援規模 및 軍事狀況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蘇聯內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경우에도 소연방의 와해로 협상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북방영토 교섭은 미·일간 전략적 이해조정 및 대소 경제지원 규모 등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장기간 협상을 요할 것이다.

한편, 1991년 일·소 양국은 외무장관회담(10. 14)에서 「日·蘇 安保隨時協議機構」 설치와 자위대·소련해군간 艦艇海上事故防止協定 체결교섭 개시를 합의하였다. 이는 일본이 종래 소련을 假想敵으로 규정하여 왔음에 비추어 볼때, 양국간 안보관계의 획기적 발전으로 평가된다. 이는 亞·太地域 多者間 安保協議機構 창설을 위해 일차적으로 域內國家들과의 兩者的 安保協力을 모색한다는 소련의 의도와 아세안 확대외상회담(7. 22~23)에서 나카야마 外務長官이 아·태국가간 안보포럼을 주장하였듯이 域內 政治·軍事的 役割增大를 모색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일·소 양국은

1992년에도 이 문제와 관련된 안보협력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 일·소 양국은 외무장관회담(4. 18)에서 양국간 경제·과학·기술·문화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15개 경제관련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일본정부는 1991년 10월 12일 25억달러의 對蘇支援策을 발표하고,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참조하여 서방국가들이 소련에 대한 자금 공여 등 경제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12. 14)하였다. 특히 시베리아 개발문제와 관련, 최근 일본은 시베리아 야쿠트 지역 및 사할린의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극동에너지개발 계획」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일·소 경제관계는 일본의 政經不可分 政策에 입각하여 北方領土問題 해결과 연계되어 있으나, 최근 일본 경제계에서 정경분리를 요구하고 있고 소련이 일본과의 經濟協力 擴大를 적극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1992년에도 계속 증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나카오 通産長官이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과 회담(10. 23)하면서 밝혔듯이, 향후 日本은 러시아공화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은 러시아공화국과 적어도 沿岸貿易協定을 체결할 것이며, 「大블라디보스 특自由經濟地域」 등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적극 참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북방영토 반환 가능성이 증대되고 일본의 대소 경제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1992년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야자와(宮澤喜一)수상의 訪蘇와 열린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의 訪日을 통하여 일·소 양국은 양국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6) 中·蘇關係

1991년 中國과 蘇聯은 북경에서 개최된 외무장관회담(4. 1)과 국방장관회담(5. 3),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5. 15~16)을 통하여 경제 및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였고, 특히 동부지역 국경문제에 대해 타결을 봄으로써 그 동안 양국 관계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로써 中·蘇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군사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5월 中·蘇頂上會談 이후 양국간 경제교류가 급증되어 1990년 중·소간 무역액이 39억달러에 달하였다. 이로써 소련은 이미 중국의 5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되었고, 1991년 5월 15~19일 江澤民의 訪蘇 이후에도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어 왔다. 1991년 8월 21일 소련 보수쿠데타 실패 이후 中·蘇間 경제교류가 다소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이 中·蘇接境都市들을 對外開放區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과 소련이 대외 경제협력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양국은 1992년에도 교역확대 등 경제협력을 위주로 한 관계발전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軍事分野에서도 양국은 1991년 5월 북경에서 개최된 국방

장관회담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미 약 7,500Km에 이르는 국경문제중 동부지역 국경선을 확정한다는 데 합의하였으며, 국경지역 주둔 군사력의 상호감축과 군사부문에서의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특히 중국은 現代戰에서 첨단무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미국의 對中 무기수출금지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소련으로부터 SU27전투기 등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 후에도 양국은 北京(6. 14)과 모스크바(11. 12)에서 國境駐屯 軍事力減縮會談을 개최하여 쌍방간 군사부문에서의 신뢰를 증진시켜 왔다. 1992년 中·蘇 모두 대내안정과 대외협력을 지향할 것으로 보이므로 양국은 국경주둔 군사력감축회담을 개최하여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등 군사분야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간 역사적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中·蘇間 경제 및 군사부문에서의 협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와 이에 따른 소련내 각 공화국들의 분리독립 추세는 중국지도부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다. 소련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중지하도록 결정(8. 29)함에 따라 中·蘇間 이념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고, 劉華清 중국군사위원회 부주석의 訪蘇(8. 19 예정)와 錢其琛 중국외교부장의 訪蘇(9. 15 예정)가 취소되는 등 양국간 접촉이 감소되어 왔다. 아울러 소련의 붕괴와 對美협력정책은 중국의 전략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

적 고립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中·蘇關係 발전에 장애가 되었으며 1992년에도 中·蘇關係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중국이 蘇聯事態를 소련 內部問題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외협력을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中國과 蘇聯(특히 러시아공화국)은 선린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소련내 공화국들의 독립이 중국내 소수민족들의 자치요구 확대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러시아공화국 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東北亞 安保環境

1990년대 초 東北亞 4強間の 相互關係는 미·소간 관계정상화를 필두로 전반적인 우호와 협력증진의 추세를 보이면서 전개되고 있다. 各 兩者關係마다 다양한 긴장요인이 존재하지만, 이들 각 양자관계는 相互依存 關係發展을 배경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갈등의 최소화, 현안의 平和的 解決,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 4強間の 그같은 양자관계 발전양상은 4強間の 勢力均衡變化, 域內軍縮 진전, 안보면에서 다자간 협의체 발전가능성 및 역내 經濟圈形成과 多者間 經濟協議體 형성 등 東北亞秩序上 네가지 전반적 특징을 배경으로 하여 나타나고 있다.

동북아 4強間の 세력균형재편은 蘇聯체제의 붕괴, 脫冷戰과 美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로 인한 미군사력의 철수추세, 日本

의 정치·군사적 역할의 상대적 강화, 中國의 독자적 역할확대(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포함) 현상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세력균형재편은 不確實性 및 不安定을 수반하여 긴장상태를 증대시킬 수도 있으나, 현재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력균형재편은 과거 냉전적 대결의 기반이었던 미·소간 軍事的 對決의 解消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전반의 탈냉전기류 확산, 군사력의 효용성 감소와 같은 효과를 수반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 철수로 조성될 수 있는 힘의 空白이 日本의 군사대국화에 의해서 메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美國이 군사력을 철수하더라도 역내에서 유일한 軍事超強國의 위치를 상실할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는다.⁴⁾ 일본의 軍事大國化는 촉진요인과 함께 억제요인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그 경향이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군사적 주도권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구체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독자적 역할확대도 군사력 팽창보다는 정치적 발언권 확대와 역내 경제활동확대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東北亞에서 진행되고 있는 勢力均衡再編은 한반도 통일환경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수반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브레진스키 前 미국 대통령안보담당보좌관은 1991년 12월 6일 “日本은 超大國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美國의 衰退가 갖는 相對的 意味를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였다.

1987년 미·소간에 주로 유럽에 배치된 中距離核全面廢棄에 관한 협정(INF)이 조인되면서 시작된 세계적 핵무기감축 움직임은 1991년 미·소 정상회담(7. 30)에서 타결된 전략무기감축협상을 계기로 동북아에도 파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부시 미대통령의 戰術核 폐기선언(9. 27)과 뒤이은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전술핵무기 전면폐기선언(10. 5)으로 본격화되었다. 戰略核武器減縮協商에 따라 북태평양지역에 배치된 양국 전략핵무기가 부분적으로 감축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며, 이 지역에 배치된 美國의 지상 및 해상 전술핵과 蘇聯의 모든 전술핵이 폐기될 전망이다. 소련의 핵무기통제위기는 양국간에 타결된 핵군축협정의 실행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러시아공화국은 소련내 전술핵 통제 및 제3세계로의 핵무기확산저지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이의 실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핵군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域內軍縮은 미·소간의 데탕트와 양국 공히 경험하고 있는 경제력 약화로 인하여 촉진된 것으로서 주로 양국간에 한정된 현상이지만, 이들이 동북아에서도 군사적 대결의 主役들이었다는 점에서 역내 전반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양국은 재래식 군사력의 경우에도 유럽에서 이루어진 在來式武器減縮協商(CFE)과 같은 공식적 협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자의 일정에 따라 감축을 실시하고 있다.

동북아 전반에 등장하고 있는 또 한가지 특징은 역내 多者間 安保協議體가 형성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은 원래 蘇聯이 먼저 제기했으나, 기존의 미·일 및 한·미간 쌍무적 군사동맹체제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안보체제를 견지하고자 하는 美國의 反對에 부딪쳐왔다. 그러나 1991년 미·소정상회담(7. 30)에서 중동문제 등 구체적 지역분쟁해결을 위해 미·소가 긴밀한 협의를 추구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은 동북아의 안보문제해결에도 미·소를 포함한 主要關聯國들의 다자간 협의와 참여의 효용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베이커 美國務長官이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한 「2+4 회담」('91. 11)에서도 시사된 바 있다. 日本은 소련과 북방영토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蘇聯을 포함한 다자간 안보포럼을 제안한 바 있으며, 아세안 역시 東南亞地域의 다자간 안보협의체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북아에서도 안보문제에 관한 다자주의적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中國은 공식적으로는 소련, 일본 등이 제안한 바 있는 다자간 안보포럼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일본의 군사대국화경향 억제, 러시아공화국의 불안정관리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조만간 肯定的 姿勢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럽에 美國 主導의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범유럽적 안보포럼인 유럽안보협력회의가 공존하듯이 동북아에도 미국주도의 미·일 및 한·미간 兩者同盟體制와 아울러 소련, 중국을

포괄한 多者間 安保協議體가 등장할 수 있으며, 1992년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동북아에서는 경제면에서도 다자간 협력체가 발전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은 소련 社會主義 崩壞이후 동북아 자유시장경제권 統合과 中國의 대외개방확대로 대폭 팽창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東亞·太 經濟圈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미국은 蘇聯·中國의 資本主義市場圈에의 통합진척으로 인하여 그 규모가 팽창하고 있는 데다 자신의 경제적 번영에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東亞·太地域을 미국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自由貿易에 기초한 開放된 經濟圈으로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經濟統合을 가속화하고 있는 유럽공동체와 아·태지역에 대한 日本의 경제적 영향력 팽창을 견제하고 양 지역을 자신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질서하에 두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각료 회의를 自由主義的인 다자간 경제협의체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美國과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日本, 韓國, 캐나다 등 아·태지역 국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리더쉽에 대체로 동조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미·일간 貿易 摩擦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東北亞地域에서 미국과 일본이 競爭하면서 相互協調하는 가운데 주도하는 경제권 및 다자간 경제협의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동북아 질서의 전반적 특징을 이룰 위 네가지 추세는 한반도 통일환경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軍縮趨勢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바, 남북한 간 정치·군사적 대화진전에 긍정적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 특히 부시 미 대통령의 전술핵폐기선언(9. 27)은 韓國政府의 非核化宣言(11. 8)을 낳고 이것은 다시 남북한간 基本合議書 채택(12. 13)을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으며, 미·소간 군축 추세가 의외의 장애요인에 직면하지 않는 한 남북한 정치·군사분야 긴장완화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美國의 主導와 日本의 協調하에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각료회의를 매개로 동북아경제권이 자유무역에 기초한 경제권으로 확대 및 통합될 경우 북한의 동북아 경제권 편입이 촉진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남북한간 직·간접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中國이 동북아 경제권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북한에 경제개혁압력을 가중시킬 경우 南北韓 경제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향후 동북아질서에서 日本, 中國의 相對的 役割增大는 한반도 통일환경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측면이 있으나, 일본이 군사·정치대국화 못지 않게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 그리고 중국이 당분간 경제문제해결과 國內政治的 安定에 정책우선순위를 두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韓半島 統一環境에 근본적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향후 동북아질서는 北韓이 조만간 國際核査察을 수용할 경우 남북한관계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반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활용하여 南北韓 和解와 平和定着을 실현하여 남북한 정치·경제통합을 앞당기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 韓國의 主要 對外關係

가. 韓·美關係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美國 東北亞政策의 토대는 긴밀한 美·日협력관계 유지 및 안정된 韓·美同盟관계의 유지였다. 이러한 한·미군사관계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나타나기 시작한 脫冷戰의 흐름속에서 調整의 계기를 맞고 있다. 1990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양국은 점진적, 단계적 주한미군감축 및 역할조정, 그리고 한·미연합지휘체제안에서의 한국군 역할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미군사관계 재조정계획이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합의는 미 국방부가 1990년에 펴낸 대아시아 군사전략보고서에서 한국에서 美國의 軍事的 役割을 기존의 主導的 役割(leading role)에서 補助的 役割(support-

ing role)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었다.⁵⁾

駐韓美軍의 감축을 결의한 1989년의 「년-워너 수정안」에 부응하여 작성된 위 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3단계 감축안을 제시했다. 1~3년간의 1단계에서는 2,000의 공군병력과 5,000의 지상군을 철수시키며, 3~5년간의 2단계에서는 제2보병사단의 構造改編을 고려하고, 5~10년간의 3단계에서는 韓國軍이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 담당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그 이상의 미군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大綱에 기초하여 미 행정부가 1991년 5월 23일 의회에 제출한 「년-워너 2차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 감축은 1992년 말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단계에선 비전투요원만이 철수하고 미군감축은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1991년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91. 11)에서 양국은 북한이 국제핵사찰을 거부하는 한 주한미군 2단계 철수계획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맞추어 한국군의 역할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바, 미군이 행사해 온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과 유엔사령부의 휴전협정관리책임이 단계적으

5) Th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 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4), p. 9.

로 한국군에 이양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관련, 리스카시 駐韓美軍司令官은 1991년 6월 “향후 6개월 이내에 유엔사 휘하의 미군 및 한국군 지상군 사령관에 한국군 4성장군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것을 한·미간 역할재조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

1991년에 진행된 한미관계 재조정작업은 駐韓美軍地位協定(SOFA)의 개정에서도 나타났다('91. 4). 주한미군의 범죄처리규정에 관한 협정으로서 1966년에 처음 체결된 同 협정은 한국정부의 刑事裁判權 자동포기조항을 담고 있어서 그간 한·미간 不平等關係의 상징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1991년 4월 개정에서는 이 毒素條項을 삭제함으로써 변화하는 한·미관계의 일단을 드러내었다.

1991년중 이루어진 한·미군사관계 재조정작업에서 가장 劇的인 것은 부시 미대통령의 전술핵 일방폐기선언(9. 27)에 따른 韓半島로부터의 核武器撤收決定이었다. 뒤이어 한국정부가 11월 8일 한반도 非核5原則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남북간 대화진척의 주요 장애요인이었던 핵문제해결에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로부터의 핵철수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한국에 대한 核雨傘 제공정책은 불변임을 밝히고 있으며, 괌島에 미국이 일부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空軍用 戰術核이 이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미양국은 이와같이 여러 측면에서 관계재조정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국제정세급변에 따른 兩國間 同盟關係의 弛緩

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왔다. 첫째, 한·미양국은 한·미·일 3국이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속에서 공동보조를 견지하기 위한 의견교환과 조정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미·일 高位政策協議會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4. 30)하였다.

둘째, 한·미 양국은 1985년 이후 미국이 강력히 제기해 온 戰時駐留國支援協定(WHNS)을 1991년 7월 타결함으로써 미국이 탈냉전의 상황에서도 한·미군사동맹을 미국 東北亞 安保戰略의 주요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셋째, 미국은 한·미간 연례합동군사훈련인 팀 스피리트훈련을 지속할 의사임을 여러차례 확인하였다. 미국은 1991년 초 페르시아만에서 對이라크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에서 팀 스피리트훈련을 실시했으며, 1991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91. 11)에서도 兩國은 1992년 팀 스피리트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한국에 대한 美 軍事力 前進配置 자체는 장기적 관점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 지역 고위 담당자인 포드 首席 副次官補가 1991년 4월初 訪韓하여 “서기 2000년이 훨씬 지나서도 주한미군병력을 상당 수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한편 미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미 군사력 전진배치를 일정 수준 유지하되 이에 따르는 자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韓

國에 대한 防衛費分擔要求를 확대해 왔다. 솔로몬 美 國務部 東亞·太 擔當次官補가 의회청문회(5. 17)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은 10억~30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龍山基地 移轉費用을 全額 부담하며, 1990년 7천만달러수준의 방위비분담을 1991년에는 두배이상 증가된 1억 5천만달러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1991년에 처음으로 4천 3백만달러규모의 人件費를 부담하게 되었다. 1991년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3차 韓·美政策檢討委員會(PRS)에서 미국측은 한국측의 직접분담규모를 더욱 늘려 1995년도에는 4억 2천만달러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미국은 탈냉전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 空軍力現代化 필요성을 역설해 왔으며, 이러한 현대화작업을 미국의 주요 군수산업체들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미 군수산업체와의 合作生産(일본과는 合作開發)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社의 F-16기종 120대분을 일부 구입, 일부 합작생산하는 次世代戰鬥機事業(Korean Fighter Aircraft Program: KFP)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략 70억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1992년의 한·미관계에서도 駐韓美軍減縮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될 것이다. 北韓의 核開發문제로 한·미양국은 美 第2師團 兵力의 축소개편을 포함한 2단계 철수계획을 연기함으로써 당분간 미군의 추가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이

나, 南北韓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12. 13), 남한이 남북한 동시핵사찰을 제의하는 등 태도변화를 보이는데다 북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하여 日本 등 西方의 경제협력확보를 중요시 할 전망임에 따라 북한은 1992년중 국제핵사찰을 수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가중되는 국방비삭감압력에 직면해 있는 美國政府로서는 1992년중에 주한미군 2단계철수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는 1992년에도 팀스피리트훈련지속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合意書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북한핵사찰과 팀스피리트훈련중지를 연계하여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 훈련은 중지되거나 적어도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사찰수용이 늦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며, 그럴 경우 韓·美양국은 南北韓間 關係改善 速度를 둘러싸고 상호의견조정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美國은 부시대통령의 전술핵 폐기선언이후 한반도 핵문제해결에 있어 韓國의 協商主導權을 인정할 것을 시사한 바 있으나, 美國의 기본입장은 北韓이 핵재처리시설 등 핵무기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국제핵사찰 완전수용 및 核開發意圖 完全拋棄를 전제로 해서만이 韓·美·日에 대한 北韓의 對外關係改善에 협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명한 기본합의서가 核問題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담고 있지 않

은 점을 들어, 美國은 한국정부에 異議를 제기(12. 13)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南北韓 關係改善과 核問題 解決의 先後에 대한 韓·美 양국간의 이견이 외교적 문제로 발전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1992년 1월로 예정된 부시 미대통령의 訪韓時 주요협지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는 남북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국제핵사찰수용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美國은 북한의 核査察受容 以前 한국정부의 對北韓 經協擴大 自制 등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의 방위비분담증액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1992년 중에도 더욱 強化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의 국제핵사찰거부로 駐韓美軍 2단계 철수계획이 잠정적으로나마 중단된 데다, 美 大統領選舉와 관련하여 議會에서 제기될 동맹국 방위분담요구에 대해 미 행정부로서는 더욱 민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 韓·日關係

訪韓한 가이후 日總理와 盧泰愚大統領과의 정상회담(1. 9~10)에서 한·일 양국은 변화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정세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등을 협의하였고, 재일한국인 지문 날인제도의 철폐에 합의함으로써 국교정상화 이후 줄곧 양국간의 외교현안이 되어왔던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

선문제 해결의 중요한 轉機를 마련하였다. 年初의 이와 같은 협조적인 분위기가 1991년도의 양국관계에서 전반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일 외상회담(4. 24~26)에서 양국은 한·미·일 외무당국자간의 고위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3일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회합하여 북한의 핵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며, 아·태 지역에서 외교 안보 문제를 3국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3국이 이 협의회를 구성한 사실은 동북아질서 재편 움직임 가운데 3국간 外交協力을 긴밀히 하기 위한 의도가 표출된 것이며, 기존의 雙務關係 형식을 벗어난 3者間 政策會談의 定例化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일·북한의 수교협상문제는 한·일간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잠재하고 있으나, 노태우-가이후 정상회담(1. 9)에서 양국은 일·북 관계개선과 관련하여 5원칙⁶⁾을 확인하였고, 한·일외상회담(4. 24~26)에서 이를 재확인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兩國의 立場이 충분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사전협의만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큰 마찰없이 조정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日本으로서는 최소한

6) 한·일頂上會談에서 합의된 日本의 對北韓 修交協商 5원칙은 ① 한·일간 사전협의하에, ② 남북교류 및 대화진전에 맞추어 추진하고, ③ 協商時 北韓의 핵안전협정서명을 촉구하며, ④ 양국간 수교이전에는 경제협력과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며, ⑤ 북한의 開放誘導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이 핵사찰을 수용할 때까지는 對北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보조를 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1992년중에 북한의 핵사찰수용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修交時期, 배상금 문제 등 경제적이슈를 중심으로 일·북한교류의 규모와 속도를 놓고 한·일 간에 이견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1년 한국의 對日 무역적자는 9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992년에는 10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월의 가이후 訪韓時 양국은 한·일 기술협력 실무자회의 설치에 합의하였고, 제 1차 한·일 무역산업기술 협력위원회가 개최(6. 17~18)되는 등 기술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일간에 정치·외교·군사 면에서 중대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992년에는 무역역조문제와 기술이전 문제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韓·蘇關係

1990년 9월 30일 大使級 外交關係를 수립한 한·소양국은 이어 모스크바 정상회담('90. 12. 14)을 통하여 상호간 유대와 협력 강화, 武力威脅 및 使用 拋棄, 남북대화에 대한 蘇聯의 支持를 확인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등 4개 협정을 체결하여 우호 협력을 도모해 왔다.

1991년에 들어서도 한국과 소련은 로가초프 蘇聯외무차관의 한국 방문(1. 7)시 양국 외무부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소련측은 한국정부에 경제협조를 요청하였다. 經濟協力문제와 관련, 마슬류코프 제 1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소련정부 대표단이 방한하여 제1차 한·소 경제협력위원회 회의(1. 17~22)가 개최되었다. 양국은 이 회의에서 수출 및 투자, 자원개발, 과학기술 교류, 어업 등 4개분야의 경제협력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또한 한국정부는 소련에 30억달러의 경협자금(1991년 15억달러, 1992년 7억달러, 1993년 8억달러)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총회(4. 1~2)에 다시 로가초프 외무차관이 방한하여 양국간 우의를 증진하는 한편, 濟州道 頂上會談(4. 19~20)에서 소련은 유엔 加入 및 北韓의 核査察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양국은 동시베리아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韓國의 참여와 한·소의 기업 합작투자 촉진 등에 합의하였다.

소련에서의 보수쿠데타(8. 19~21) 실패 후 蘇聯邦의 崩壞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소련 각 共和國들의 經濟主權 강화를 예상하여 聯邦政府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당 공화국들과는 자원개발 및 합작투자 분야에서 각각 협력을 도모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16일에는 모스크바에서 한·소 어업협정이 가서명되어 한국의 원양어선들이 태평양 북서지역의 소

련경제수역 및 오호츠크해 공해수역에서 어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對蘇經協借款과 관련, 한국정부는 1991년에 銀行現金借款 10억달러를 공여하고, 소연방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전 대차관 8억달러를 예정대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1992년 이후에 집행할 소비재차관 7억달러와 자본재연불 수출자금 5억 달러 등 총 12억달러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을 유보하기로 결정(12. 11)하였다. 따라서 연방체제나 대외경제은행 등 소련 측의 經協窓口가 명확해지지 않는 한 한국정부는 1992년 소련에 지속적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

1992년 한·소 경제협력은 소연방의 해체로 직접 各共和國과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공화국은 92년에 自由經濟地域의 협의·수립을 위하여 블라디보스톡港 開放, 韓國에 代表部 設置, 열친 大統領의 訪韓을 계획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모스크바에 한·소 무역센타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어 한국과 러시아공화국과의 경제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알마아타에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무역관이 개설 되면 한국과 카자흐공화국간 경제관계도 활성화될 것이다. 韓國政府가 소련진출 경험이 있는 유럽국가들(헝가리, 핀란드)과 공동으로 소련 건설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1992년부터는 건설분야에서도 각 공화국과의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소 양국간 경제분야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軍高位將星의 한국방문 등 軍事分野에서도 交流가 이루어지고 있다. 蘇聯軍 현역장성으로서는 韓國戰爭 이후 최초로 빅토르 노보질로프 소련극동군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11. 3)하였다. 또한 니콜라이 아멜코 소련외무성 자문위원은 주한미군에 대한 소련의 입장이 종래의 「무조건 철수」에서 「쌍무적 결정에 따른 해결」로 전환되었다고 밝힘(11. 5)으로써, 양국간에는 군사적 협력의 분위기가 싹트게 되었다. 이러한 한·소 군사 교류가 증대되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 韓·中關係

1991년 韓國과 中國은 北京(1. 30)과 서울(4. 9)에 무역대표부를 교환 설치함으로써 경제적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간 무역액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의 3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표1 참조).

그러나 中國의 韓國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차등관세(타국에 비해 5~30% 초과 부과)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韓國의 對中 무역적자는 양국간 경제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1991년 12월 20일 체결된 무역협정을 통해 韓·中 間 무역역조 문제는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표 1〉 韓國과 中·蘇間 교역증대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 출			수 입			교 역 량		
	'90	'91 (1~6)	증가율	'90	'91 (1~6)	증가율	'90	'91 (1~6)	증가율
北方計	2,731	1,733	46.9	2,889	1,921	63.5	5,620	3,654	55.2
중 국	1,553	1,060	54.1	2,268	1,484	63.2	3,821	2,544	59.3
소 련	519	214	6.7	370	310	86.2	889	524	42.8

자료: 關稅廳 추계치.

註: 對중국 수출은 홍콩을 통한 간접수출을 포함한 推定值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국과 중국은 무역대표부를 통하여 영사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양국은 제한된 범위의 정치적 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中國은 南北韓의 유엔동시가입(9. 17)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韓半島의 평화정착을 위한 韓國의 노력에 간접적인 지원을 하였고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이후 중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국호를 사용(9. 18)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각료회의(11. 12~14) 참석차 韓國을 방문했던 錢其琛 中國外交部長은 盧대통령을 예방(11. 12)한 바 있고 기존 무역대표부에 영사관의 기능을 확대해 줄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韓·中關係는 1992년초에 한단계 높은 차원(수교 교섭 개시 등)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蘇聯 사회주의가 붕괴됨에 따라 1991년중 中國은

北韓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으며, 이는 韓·中 정치관계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하여 북한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할 필요에 직면해 있는 중국으로서는 1992년에도 北韓의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일성과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保守 元老들이 일선에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한, 중·북한관계는 우호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이러한 요인이 韓·中修交 교섭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II. 北 韓 情 勢

1. 國內情勢

가. 理念과 權力承繼 問題

북한은 소련 및 東유럽에서의 社會主義 沒落, 經濟難 深化, 한국과의 國力격차 심화 등 體制威脅 要因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思想統制를 강화하고 있다. 金日成은 1991년 「신년사」에서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이며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토대위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장 활력있는 사회”라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金正日은 1991년 5월 5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우리는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 위력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여야 합니다”라고 결론을 맺음으로써 체제고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식대로 살아나가는 구호는 혁명적 구호」, 「조선식 사회주의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높이 발양시키자」, 「사회주의 지키세」 등 체제수호적 象徴造作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체제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으로는 당 및 군부, 국민의 반발에 의한 政治的 不安定이 초래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북한의 權力核心層은 소수의 빨치산 출신을 제외하고는 世代交替가 가속화되어 대부분 技術官僚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술관료는 김일성·김정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체제옹호 인물로 간주되나, 혁명1세대와는 달리 이데올로기 완화와 實用主義的 정책추진을 選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정일의 북한인민군 525부대원에 대한 친필서한(2. 11) 및 인민군 창건 59주년 기념 「로동신문」(4. 25) 사설에서 군과 수령·당·대중의 統一團結을 강조하고 김정일에 대한 군의 헌신성을 촉구한 사실 및 김일성이 1991년 2차례(10. 17~18, 11. 12~13)에 걸쳐 군인집회에 공식 참가하여 군의 결속을 강조한 사실 등에 나타나듯이 軍部가 體制威脅要因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의 業績에 대한 象徴造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난에 비추어 볼 때 국민적 지지 확보에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經濟難 가중으로 인민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外部情報가 擴散되어 궁극적으로 북한 인민들이 「우리식 사

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된다면, 북한체제가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편, 權力承繼問題와 관련하여 1991년중 김일성은 함경남도(7. 10~8. 5, 8. 31~9. 6), 함경북도(8. 31~9. 6) 등 12차례의 「현지지도」 활동, 장기간의 중국방문(10. 4~13), 북한을 방문한 李鵬 중국총리(5. 3~6), 알베르 르네 세이셀대통령(6. 23) 등 외국대표단과의 30여 차례 회담, 일본 언론인들과의 기자회견(4. 19, 9. 11 마이니찌신문, 5. 13 요미우리신문, 6. 1 교도통신)을 갖는 등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遂行하여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특히 김일성은 軍 士官長大會(10. 17~18)와 軍 中隊長大會(11. 12~13) 등 군인집회에 참가하였다. 이에 반해 김정일은 단지 1차례의 現地指導(10. 31, 광복백화점에 대한 시찰)와 김일성 수행차 3차례 공식행사 참가 등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후계자의 위치에 있지만 김정일에 대한 公式的인 權力承繼 與件은 아직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2월 24일 북한 노동당 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金正日이 軍 最高司令官으로 추대되었고, 이것이 김정일의 권력승계과정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으나, 북한의 대내외적 난관(마이너스 성장의 북한경제, 한국의 북방외교 공세, 소련 및 사회주의진영의 몰락 등)을 고려할 때, 북한으로서는 난관극복을 위하여 당분간 김일성 중심의 현체제 유지에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992년중에 김정일로의 權力承繼(총비서직 승계)

를 위한 제7차 당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1992년 기간동안에 북한의 지도부로서는 김정일에게 권력승계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黨·政·軍 方面에서의 성과 - 예컨대 남북대화 및 군축문제에서의 성과, 3차 7개년 계획에서의 성과 등 - 를 김정일의 업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지도자로서 김정일에 대한 상징조작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992년 4월 개최될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주석직이 김정일에게 이양될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지만, 북한이 당 국가라는 점에서 당총비서직의 이양 승계까지 1992년내에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로의 당총비서직 승계 및 김일성의 완전은퇴가 당분간 급진전될 전망이 없다고 할 때, 북한정치체제는 앞서 지적한 몇가지 體制威脅要因의 內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92년에는 중요한 변화를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즉 國內體制 안정과 對外孤立 탈피를 위하여 북한의 對外 및 對南戰略上的 進取적 변화는 1992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념 및 권력구조 등 북한의 정치체제가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나. 經濟事情과 開放問題

1990년말 현재 북한의 1인당 國民總生産은 1,064달러로 推計되며, 경제성장률은 휴전이후 최초로 -3.7%를 기록했다. 북한은 1987년부터 제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1987~1990 4년간 평균성장률은 1.21%로서 이 계획기간중

연평균 성장을 목표인 7.9%에 크게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북한은 1991년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 2 차회의(4월 11일)에서 1991년도 예산규모를 173.5억달러로 책정하였으나, 예산 증가율은 세입기준으로 1990년의 6.2%보다 대폭 축소된 4.0%에 머물렀다. 북한이 이처럼 緊縮豫算 基調로 전환한 것도 경제침체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표 2〉 북한의 실질경제성장을 추이 (단위 %)

1987	1988	1989	1990	연평균
3.3	3.0	2.4	-3.7	1.21

자료 : 통일원, 「북한경제종합평가」 각 년도판.

한편 북한의 貿易赤字는 계속 누적되어 외채부담을 가중시킨 결과 1990년말 현재 북한의 外債總額은 78억 6천만달러로써 총수출규모(20.2억달러)의 약 4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회복에 필수적인 에너지 등의 수입에 제약을 가져와 경제상황의 악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 북한의 연도별 외채현황 (단위: 억불)

1986	1987	1988	1989	1990
40.6	47.8	52.0	67.8	78.6

자료 : 통일원, 「북한경제종합평가」, 각 년도판.

김일성이 1991년 「신년사」에서 社會主義 經濟建設의 첫째 과업으로 제시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운다”는 것은 이들 産業分野가 不振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북한경제 전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産業施設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不足으로 가동률이 30~40%에 지나지 않고,⁷⁾ 주민생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食糧事情은 극도로 惡化된 상황에 있다.⁸⁾ 이외에도 北韓經濟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는 投資財源의 부족, 生産設備의 노후화, 기술낙후, 생산의욕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經濟管理의 側面에서 당위원회의 集體的 指導를 기본으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 역시 계획과 생산을 원활히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목적”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인민생활

7) 1990년 북한의 원유도입량은 정유능력(350만톤)에 비해 약 100만톤이 부족한 252만톤에 불과하며, 특히 소련으로부터의 원유공급 차질로 인해 북한의 승리정유공장은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8) 북한이 1990년에 필요로 하는 식량의 총량은 약 600만톤으로 추정되는데 1989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60만톤, 90년에는 무려 120만톤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식량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북한의 연형묵 총리는 1991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동남아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태국으로부터는 '91년 중에 50만톤의 쌀을 도입하고 2~3년 내에 모두 1백만톤의 쌀을 사들이기로 합의했고 주정과 가축사료의 원료인 태국산 타피로카 50만톤을 추가 구입하기로 하였다.

과 직결된 消費財生産에 注力하고 있다.⁹⁾ 한편 김일성의 중국방문시(10. 4~13) 합의된 중국으로부터의 石油供給, 借款提供 등도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1992년에 북한은 대일 수교를 통한 賠償金 확보로 經濟問題를 解決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對外負債 및 貿易赤字 등 심각한 재정난과 식량·에너지난 그리고 기술 및 설비시설의 낙후에 따른 경제적 침체는 1992년에도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식량문제의 경우 1991년 작황이 다소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북한 농업은 중공업 우선 투자에 따른 農業投資의 경시, 新品種改良 저조, 무리한 化學肥料 사용에 의한 지력의 쇠퇴, 농민들의 근로의욕 저하 등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 구조적이고 複合的인 요인이 작용한 만큼 근본적인 농업개혁이 없는 한 식량생산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北韓은 1990년 11월 소련과 체결한 「朝·蘇貿易決算體系變更에 관한 協定」에서 1991년부터 태환성화폐와 국제가격에 기초하여 쌍방간 무역 및 경제협조를 해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였고, 1991년 4월 28일 체결된 「1991년도 貿易 및 經濟協調에 관한 協定」에서 국제가격기준에 의한 硬貨決濟原則이 再確認됨으로써 그동안 북한이 對蘇貿易에서 누렸던 혜

9) 1989. 6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경공업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1. 7. 30. 「로동신문」사설에서는 인민소비재 생산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國際價格의 30% 水準에 불과한 友好價格으로 供給받던 原油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中國도 1991년 5월 李鵬총리의 北韓訪問時에 북한에 1992년 부터 硬貨決濟를 要求한 것으로 알려져 中國으로부터 國際시세의 50% 수준(배럴당 10달러)으로 도입하던 총 1,094만 배럴 상당의 중국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1억달러 정도의 추가 외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北韓은 당면하고 있는 經濟沈滯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지만, 改革·開放을 하게 되면 북한경제의 市場經濟化 뿐만 아니라 政治的 民主化를 초래하여 체제에 대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北韓이 經濟沈滯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경제구조는 그대로 둔 채 對外經濟開放을 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대외개방 역시 체제유지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全面的인 對外開放은 현실적으로 不可能한 형편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개방이 북한주민에 주는 영향을 극소화시켜 체제가 손상받지 않는 범위에서 「統制된 開放」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北韓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유엔개발계획(UNDP) 회의(7.7)에서 두만강 유역에 經濟特區를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중국의 장춘에서 열린 「동북아경제기술발전 국제세미나」(8.29~31)와 평양에서 열린 유엔개발계획(10.15~

21) 회의에서 북한이 「선봉지구 경제무역지역 개발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개방은 制限된 地域을 經濟特區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¹⁰⁾

다. 社會逸脫現象과 統制問題

소련 공산당 와해 등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위기 및 북한의 경제난 심화 등 국내외적 여건 악화로 인하여 북한사회에서는 1991년에 걸쳐 식량폭동과 같은 집단적 저항, 사회범죄 및 일탈행위의 증가, 노동기피 풍조의 확산 등 住民 不滿이 표출되고 있다. 또한 소련·동유럽 유학생 및 해외여행자를 통한 서방문물 유입으로 청소년층에 西歐風潮가 확산되고 있으며, 간헐적인 비조직적 저항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 북한에서 1991년에 들어 발생한 식량폭동 및 약탈사건은 4~5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1년 5월 평북 운산지방에서의 食糧配給問題로 야기된 주민폭동사건, 6월 말~7월초 평북 신의주와 함남, 흥남등 북한지역 36개소에서 식량약탈소동 등에서 나타났듯이 특히 食糧難에 기인한 주민의 暴動事件이 점차 규모를 확대하면서 진전되고 있다.

10) 경제특구는 국내적으로는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한 채 그 일부에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한편으로는 자본형성과 외화획득을 실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측 시장메카니즘의 국내침투는 정책당국이 통제하는 일종의 완충지역이다. 북한이 거론하고 있는 선봉, 나진, 청진 등의 지역은 이같은 요건을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경지역이거나 연안지역이다.

둘째, 주민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어린이 유괴, 외화 날치기 같은 新種犯罪가 나타나고 있으며, 직책을 이용한 횡령 배임사건, 공장 및 자재 공급소의 중견간부들이 상점판매원과 결탁하여 물건을 암시장에 내다파는 등의 社會犯罪 및 逸脫行爲가 증가되고 있다.

셋째, 주민생활 악화는 또한 勞動意慾 상실과 勞動紀綱 문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북한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인민들이 경이적인 생산위업을 달성할 것과 충성심을 보일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북한 주민들의 노동기피 현상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勞動忌避 풍조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효율성과 연계된 문제로서 북한 경제난 심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사회적 일탈현상을 최소화하고 북한체제 고수를 위해서 사상통제 강화 및 사회주의 우월성 강조 등 주민사상 동요방지에 부심하고 있다. 이는 특히 소련의 쿠데타 실패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바, 북한은 閉鎖化 政策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도매체를 통하여 「사회주의 우월성」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大衆集會를 개최하는 한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소련 및 동유럽의 자유화 바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외부바람」을 막기위해 소련 및 東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에 관한 기존 資料를 모두 回收·廢棄하도록 조치하

고 있으며,¹¹⁾ 또한 외국에 체류했거나 여행을 경험한 주민을 특별 감시하고 있다. 이들은 「710번 감시대상」으로 분류되는 바, 유학생·원양어업노동자·중국여행자·공무원·사절단 및 시베리아 벌목공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오염사상 세척과정」이라고 불리는 이념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북한은 청년층에 대한 思想敎養 強化를 위하여 처음으로 1991년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북한은 8월 18일 부터 청년절 당일인 28일까지를 「靑年學生 祝典期間」으로 설정하고, 정치·경제·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북한 전역의 청년학생들을 참가시킨 가운데 전국 규모의 거대한 행사를 개최하였다.¹²⁾ 북한은 각 선

11)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료의 회수 폐기 조치는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출판총국은 고르바초프 문헌집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정상들의 연설문을 폐기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할 것, 중앙당 교육국은 고등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역사교육을 중단하고 학습교재를 수정 보완할 것, 각 도당위원회는 각급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레닌선집」과 「레닌저작집」을 전량 회수하고 대출을 일체 중단할 것, 중앙방송위원회는 만수대 TV를 통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극영화 방영을 일체 중지할 것 등이다.

12) 김정일은 북한 전역의 청년 사로청원들에게 보낸 편지(8.26)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 전위가 되자」를 통해, “청년들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가며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와 생활풍조에도 물젓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썩어빠진 부루조아적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의 투쟁을 강하게 벌려 자그마한 요소도 우리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항일혁명투쟁속에서 마련된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혁명의 중국적 승리를 이룩하자면 그 계승자인 청년들이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전매체를 통해 청년절이 김정일의 배려에 의해 제정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일이 靑年世代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등 김정일과 청년세대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김정일 後繼體制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적 일탈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상황은 단기간에 호전될 전망이 미약하기 때문에 경제문제에 기인한 사회적 불만은 1992년에도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간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합의되어 북·일 수교가 내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인민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992년에는 북한당국의 철저한 정보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東유럽이나 소련에서의 共產體制의 崩壞에 관한 정보와 그 의미가 주민들 사이에 점차 폭넓게 확산되어 체제에 대한 불신감이 심화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일본과의 수교 이후 증가된 訪北僑胞를 통하여 서방문물이 유입되고 해외근무자·유학생 등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유포됨으로써 주민들은 더 큰 동요를 보일 것이다. 또한 김정일의 승계문제 등과 겹쳐 정권과 체제에 관련된 관심이 더욱 증대할 것이다. 청년세대의 사상문제는 강화된 사상교양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심화될 것이며 사회적 일탈행위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응하여 지도부의 체제단속은 내년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더 강한

동요와 더 강한 사회통제로 인하여 사회의 긴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종합해 볼 때 1992년에도 북한 사회는 사상동요와 체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통제와 개방 사이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긴장과 혼란때문에 위로부터의 점진적인 체제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 방향은 중국에서 있었던 농업 부문과 공업부문에서의 소유제의 개선에서 시작될 것이다.

2. 北韓의 主要 對外關係

가. 蘇·北韓關係

기존의 소·북한관계의 특징은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한 동맹관계로서, 이 동맹관계는 한국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 9월 30일 소련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소·북한관계는 급냉각되었다. 소련은 이러한 관계 변화의 구체적인 조치로 1990년 11월 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소·북한 무역회담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1991년부터 쌍방간 무역거래를 硬貨로 決濟토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군사분야에서는 “동맹자들 앞에 다진 의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련 보수파 쿠데타 실패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과의 지속적인 군사협력강화를 추구하였다. 실제로 소·북한간의 군사협력을 위해서 蘇聯 軍事代

表團(단장 국방차관 콘스탄틴 코체토프)이 북한을 방문(1. 10~15)하고 쌍방 군사협력 강화를 다짐하였다. 이 방문의 주목적은 軍事次元에서 전통적인 친선협조 및 단결을 강화하고 韓·蘇관계 급진전에 따른 북한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손성필 駐蘇 북한대사는 소련의 外務次官을 면담(3. 1)하고 韓·蘇 수교후 처음으로 양국관계 개선 희망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북한 정부경제대표단이 소련을 방문(4. 1)하여 무역협정에 조인하였다. 이 무역협정은 무역상품 가격을 국제가격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決濟方式 또한 硬貨決濟로 변경하였다. 이 경제 대표단의 소련방문은, 주요 방문지가 소련연방 구성 공화국들이라는 점에서, 소련의 個別構成共和國과의 상호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5월과 6월에 걸쳐 북한과 소련은 기존의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여러가지 협력협정을 조인하였다. 「91~93년 문화 및 과학협조계획서」(5. 29), 「91~93년도 과학협조계획서(농업부문)」(6. 20), 「91~92년도 기상수문분야 협조의정서」(6. 26) 조인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과 소련간 관계는 미미하나마 지속되어 왔다. 특히 군사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소·북한간 관계가 종래의 수준에서 유지되게 된데는 소련군부내 強硬保守勢力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월19일 발생한 소련의 강경보수세력에 의한 쿠데

타 실패로 소·북한관계는 전반적으로 냉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련은 쿠데타 실패이후 북한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다. 모스크바방송 등을 위시한 소련의 언론들은 南北高位級會談 연기가 蘇쿠데타를 빙자한 북한측의 고의적인 조치였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김정일에 대하여 그의 공식지책을 무시한 채 「김일성의 아들」이라고 호칭함으로써 김일성 부자 세습체제를 간접적으로 부정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소련 쿠데타 실패 이후 가속화된 소련의 변혁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반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소련의 상황은 소련자체의 문제로서 그러한 개혁이 잘 추진되고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對소련 유화제스처를 보냈다. 실제로 8월 30일 오진우 人民武力部長은 샤푸슈니코프 蘇聯 國防長官에게 축전을 보내고 9월 5일 김영남 副總理겸 外交部長은 판 킨 소련 外務長官에게 「우호불변」메세지를 보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1992년 소·북한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政治的인 側面에서, 북한과 소련은 더 이상 동질성을 추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북한과 소련은 서로의 체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단계에 까지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더 이상 북한을 냉전논리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 동맹관계의 파트너로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體制變化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經濟的 側面에 있어서도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기존의 同盟

關係에 의한 援助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소련이 경제성장률사상 최저치인 -12% 를 기록하고 국가재정이 파탄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蘇聯의 國家財政을 살펴보면 총적자 규모가 1991년말까지 1,533억 루블로 확대되고, 외화보유고의 고갈로 외채상환 능력(91년도 상환 의무액 130억달러)을 잃게 되었다. 더구나 1991년 곡물수확 실적이 1억 6,500 만톤에 불과하여 연간 예상 소요량 2억 3,200 만톤에서 6,700만톤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蘇聯 經濟難의 심화는 북한과 소련간의 경제협력을 아주 어렵게 할 것이다. 실제로 소련이 1992년부터 경화결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구공화국들도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소·북한간의 경제협력 지속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軍事部門에 있어서, 소연방이 붕괴된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군사부문에 대한 통제권은 약화될 수 밖에 없는 바, 소·북한간 軍事同盟은 자연 유명무실해 질 것이며 소련의 對北 군사원조 또한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북한은 점차적으로 蘇구공화국들과의 개별적인 관계를 확대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는 소·북한간에도 실리추구에 입각한 현실주의 외교관계가 새로이 수립됨을 의미한다. 蘇聯邦이 독립국가공동체로서의 재편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미 연방정부의 권한은 각 공화국에 이전되었고 러시아공화국이 느슨한 「국가연합」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더이상 소·북한간에는 기존의 政治·經濟·軍事的 協力關係가 존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中·北韓關係

중·북한관계는 북한이 1989년 6월 4일 天安門事態를 「반혁명폭란」으로 규정하고 중국공산당의 무력진압 조치를 지지한 이래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특히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권의 체제변동을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和平演變) 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비난하면서 정치·이데올로기적 공동보조를 취해왔다.

1991년 들어 소·북한관계는 서로의 체제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단계로까지 악화되어 간 반면, 북한과 중국은 보다 더 빈번한 접촉을 가지면서 상호 理念 및 體制의 一體性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諸般 政策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북한 黨國際部長 김용순은 중국을 방문(1. 15~1. 22), 중국 黨總書記 江澤民, 對外連絡部長 朱良 등과 회담을 가졌다. 특히 江澤民 총서기와의 회담에서 쌍방은 “특수하고 피로써 맺어진 혈맹관계”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주목되는 점은 김용순이 邊境開放區로 지정된 중국의 黑龍江省을 방문한 사실이다. 따라서 김용순의 중국 방문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상호 대처방안과 더불어 북한의 경제개방 필요성의 증대에 따른 對 중국 경제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무원 총리 李鵬이 북한을 방문(5. 3~6)하여 김일성 주석 및 연형묵 총리와 각각 가진 회담에서는 양국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 지속,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지지,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지지 등이 공식적으로 표명되었다. 동시에 李鵬 총리는 韓·蘇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양상을 지적하면서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을 북측에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중국외교부장 錢其琛이 訪北(6. 17~20)하여 북한 당국과 북한의 유엔가입 및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수용의사 표명후 당면하게 될 국제정세에 대한 상호 시각조정을 위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과 中國과의 이러한 관계 긴밀화는 소련의 강경보수세력들에 의한 쿠데타사건을 계기로 한층 더 가속화되었다. 소련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8월 1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朱良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용순과 장시간 회담을 하였으며 김일성과도 한차례 회담을 하였는 바, 朱良의 당내 위치와 역할로 볼 때 소련사태가 주로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이 제3세계 국가들을 순방하는 길에 제일 먼저 중국을 방문(8. 24)하여 소련사태를 논의하였고, 10월 4일에서 13일까지 10일간 북한 주석 김일성이 중국을 공식방문하기에 이르렀다. 중·북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 해소와 국제적 핵사찰 압력을 비롯한 북·일 수교 및 북·미관계 개선 등의 외교적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으로부터의 지원과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은 고위지도자간의 빈번한 상호방문을 통해 中·北 韓關係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계속 강화하여 왔다. 따라서 중국에서 소련과 같은 政治變動이 발생되지 않는 한, 中·북한 양국은 사회주의체제 고수라는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발전시킬 것이다.

이러한 諸 상황을 바탕으로 1992년에 전개될 中·북한 관계의 전망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政治的 側面에 있어서, 소련 보수와 쿠데타 실패 이후 북한과 중국은 내부적인 체제단속을 위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상호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김일성은 공산당 붕괴를 불러온 소련사태의 파급을 우려한 나머지 대내외적 역공세의 일환으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해 나갈 것이다.

經濟的 側面에 있어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交流協力を 최대한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倍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국제가격의 절반 정도로 결제해주는 友好價格制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소련과 마찬가지로 硬貨決濟를 요구하는 등 교역조건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조치들을 최대한 猶豫시켜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곡물 및 에너지 輸入先 轉換에 따른 협조와 外換危機 타개를

위한 金融支援 등도 계속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軍事的 側面에 있어서, 중국과 북한간의 군사협력은 1991년에 이어 1992년에도 긴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소련 사태 이후 소련의 防衛費 減縮노력으로 인한 소련의 대북한 군사지원감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중국의 군사적 원조를 크게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북한간의 군사협력은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이 북한을 고립시켜 제2루마니아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들의 이익에 배치되므로 이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경제적·군사적 원조는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은 원조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이 中國式 改革開放 模型을 수용하여 그들의 經濟難을 스스로 타개해 나갈 自救策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북한의 對日, 對美 早期修交 성사를 위한 측면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동시에 북한의 對南관계 개선 또한 적극 권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것이나 핵사찰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을 고립시키는데는 적극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日·北韓關係

日·北韓關係는 그동안 非政治的인 교류의 확대로부터 政治的인 交流로 이행하여 오고 있고, 1990년대 초반에 들어와

서는 양국관계에 있어 國交正常化를 위한 정부차원의 회담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1991년에 이루어진 양국관계의 개선은 括目할 만한 것이었다. 1990년 「三黨共同宣言」(9. 24)과 3회의 예비회담(11~12월)을 거친 후, 1991년들어 5차례의 修交交渉會談을 벌이는 성과가 있었다.

1991년에 일·북한관계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은 양국 정부간의 5차례에 걸친 修交交渉이었다. 제 1차(평양 : 1. 30~31)와 제 2차(東京 : 3. 11~13)의 교섭에서 양측은 식민지 시대의 「賠償」, 「戰後45年の 補償」 및 「核査察 受容」 문제로 인하여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또한 북한측이 「在日朝鮮人の 法的 地位」를, 일본측은 「日本人 配偶者問題」의 해결을 제기했다. 제 3차(北京 : 5. 20~23) 교섭에서는 일본측이 「李恩惠」問題를 들고 나와 차기회담의 일정조차 못잡고 결렬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의 야마모토(山本榮二) 사무관과 아시아 경제연구소의 고마키(小牧輝夫) 부장을 평양에 파견(7. 9)한 후, 제 4차(北京 : 8. 30~9. 2)교섭이 이루어졌다. 이는 북한의 核安全協定 假署名(7. 16), 남북한 유엔가입안의 安保理 通過(8. 8) 및 蘇聯事態 이후 재개된 교섭이었다. 따라서 양측은 「李恩惠」問題를 비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하고, 북측은 「管轄權 問題」와 함께 보상 또는 배상문제의 「請求權 經協方式」에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제 5차(北京 : 11. 18~20) 교섭은 「부시선언」(9. 28), 「고

르바초프선언」(10. 6), 노태우대통령의 「非核化宣言」(11. 8) 및 미야자와(宮澤喜一)내각 출범(11. 5)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측의 核査察 早期受容의 요구로 인하여 외형상 난항을 보였다. 그러나 「補償原則」에 있어서는 커다란 진전이 있었던 바, 북측이 「請求權 經協方式」에 의한 「政治的 妥結」에 동의할 뜻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1991년중 일·북한간에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 이외에도 「인민외교」차원의 상호교류 및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김용순 비서는 自民·社會 양당의 초청으로 방일(2. 20~27), 당시 自民黨 幹事長 오자와(小澤一郎) 및 외상 나카야마(中山太郎)와 회담하였다. 이는 양국간 최초의 각료급 정식회담이었으며, 이를 통해 대내외활동, 국제문제 통보, 각 분야 교류 확대 등 3개항의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북한 對外文化連絡協會 정준기 위원장이 일본을 방문(4. 7~13)하여, 문화·예술·언론인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일·북한 조기 수교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한편 民間交流 擴大에 주력하였다. 9월에는 북한의 사회단체, 언론·예술인 등 7개 대표단이 방일하였으며, 이 때 「보천보 경음악단」은 9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일본 각지에서 18회의 공연을 갖기도 했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日朝友好議員聯盟團」(團長：自民黨 衆議員 石井一) 350명이 북한을 방문(7. 21~25)하여 북한의 「조일우호친선협회」와 6개항의 합의서를 조인하고 양국의 조

기수교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日朝友好親善의 배」 참관단(1차 : 7. 28, 2차 : 8. 24), 일본 탁구팀(8. 6), 「在日朝鮮人 人權擁護를 위한 일본 법률 사회활동가」 대표단(8. 16),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의 전의장인 쿠노(久野忠治) 등이 북한에 초청되었고, 카네마루(金丸信)·타나베(田邊誠)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는 물론 학·문화·노동계 인사들이 「三黨共同宣言」 1주년을 기념하여 「日朝友好協會」를 설립, 9월 19일 「국교정상화를 후원하는 모임」을 가졌다. 10월 23일에는 일본교통공사(JTB)가 관광객 225명을 모집, 全日空(ANA)소속 보잉747이 일반 여행객을 상대로 한 최초의 상업운항을 시작하였다.

1991년에는 양국간의 經濟交流 또한 증가되었다. 일본정부가 8월 1일부터 일·북한간의 하물탁송을 허가함으로써 양국의 輸出入 窓口의 확충, 專貫貨物機의 운항, 대규모 수입사절단의 파견 등이 개시되었다. 이에따라 미쓰비시(三菱), 이토츠키(伊藤忠), 마루베니(丸紅), 미쓰이(三井) 등 주요 종합상사는 8월 이래 북한과의 무역루트를 개설중이다. 일본 운수성은 북한으로부터의 화물수송을 위한 直行航空機의 운항을 허가, 그 첫 케이스로 「조선민항」이 평양에서 나고야(名古屋)까지 송이버섯 15톤을 수송(9. 5~6)하였다.

1992년에도 양국 수교교섭의 추이는 북한의 核査察 전면수용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제 6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서가 발효되고 나면 1992년에 일·북한

수교협상이 급진전될 수도 있다. 예컨대 북한은 4월 15일 김 일성의 80회 생일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바, 북한이 김 일성의 생일 전까지 핵안전협정의 서명은 물론 核査察 受容에도 성의를 보임으로써 일본과의 수교교섭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核査察 受容에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이기만 한다면, 또다른 현안인 「補償原則」도 1월로 예정된 제6차 혹은 그 다음의 제7차 교섭에서는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상원칙」의 실질적인 합의, 즉 보상금 규모의 타결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의 규모가 타결된다면 이는 북한(약 100억달러)과 일본(약 45억달러)이 제시하고 있는 액수의 중간 쪼에서 북한이 약간 양보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經濟交流·協力 부문에서도 양국은 커다란 이변이 없는 한, 상당한 결실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조총련을 비롯한 재일 동포 기업 뿐만 아니라 일본인 기업의 진출도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며, 양국은 적어도 「貿易代表部」의 설치까지 합의를 이루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이미 재미교포 박경윤(금강산 그룹 총사장)이 1991년 9월 4일 東京의 모토 아자부(元麻布)에 설립한 「금강산 국제그룹 동경사무소」의 움직임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사무소가 북한의 東京貿易事務所의 역할을 대신하고 점차로 북한의 「貿易代表部」로 승격할 가능성이 있다. 1992년에 「貿易代表部」設置가 이루어

진다면, 빠른 경우 이와 거의 동시에 國交樹立이 가시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北韓은 政·財·學·文化 등 각종 분야의 인사들과의 連帶를 강화하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일본내의 친북세력을 증대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다. 人民外交의 차원에서 상호방문 및 초청에 의한 민간교류는 물론 일본 정계의 前現 職官僚들과의 유대관계를 확보하여 修交交渉過程과 修交後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美·北韓關係

1988년 12월 6일 미·북한 외교관(참사관급)의 직접적인 접촉이 북경에서 시작됨으로써 북·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1991년 양국은 北京에서 參事官級 接觸을 14차(2. 4)에서 18차(11. 20)까지 5차례 가지면서 활발히 진행시켜 왔으나, 쌍방간의 이견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관계개선 전제조건으로 남북대화의 진전, 미군유해 송환, 테러사용의 포기, 핵안전협정의 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접촉수준의 격상,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군사훈련중지, 미·북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북한간 최대쟁점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문제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북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미·일의 협조와 국제압력으로 북한 외교부

는 성명(11. 25)을 통해 “駐韓 核武器의 철수가 시작되면 서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미국은 핵사찰의 先受容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양국간 접촉을 통해 도출된 유일한 가시적 결실은 미군유해 송환을 위한 접촉을 정례화하기로 합의(제18차 접촉)한 것에 불과하다.

미·북한간 공식접촉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진전이 없었던 데 반하여, 인적교류와 경제·체육교류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북한의 군축평화연구소 김병홍 부소장(1월), 祖平統 박영수 부위원장(3월)이 미국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참석하였으며, 祖平統 한시해 부위원장(5. 11~18)이 미국을 순회하면서 美 政·學·宗教界 인사들과 회견하였고, 최우진 대사(남북고위급회담 대표)는 5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에 결석하면서까지 미국 조지 워싱턴대 주최 학술회의에 참가(11월)한 바 있다.

미국측에서는 스칼라피노 교수를 단장으로 하고 前職 관리 및 군인을 포함하는 美아시아협회 대표단이 방북(5. 11~18)하여 주한미군의 철수와 미·북한협상수준 격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스틸웰 前주한미군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美국제안보연구소 대표단이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6. 20~24)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와 양국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관문점을 통한 미군유해 송환시, 스미스(상원 재향군인위)의원과 강석주(외교부 제1부부장)가 유해반환을 위한 「朝美共同委員會」의 설치에 합의(6. 24)

하였다. 11월 중순에는 테일러(美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부 소장)가 방북, 핵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민간수준에서의 대미 접촉·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은 「人民外交」의 일환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경제교류 및 스포츠 교류가 활발히 증진되었다. 미국과의 무역거래는 89년 통계(840만달러)이래 알려지고 있지는 않으나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재미교포와의 경제교류가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在美韓人經濟人聯合會」는 1990년 5월, 11월에 이어 1991년 제 3차(9. 10~24) 北韓産業視察團을 구성, 산업시찰 및 합영상담을 목적으로 방북했다. 또한 미국을 방문한 북한대표들도 재미교포와의 접촉 및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체육분야의 미·북한간 직접교류도 이루어져 1979년 「평양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이래 12년만에 10월 12~22일까지 북한 국가대표 축구팀이 미국에서 친선 경기를 가졌다.

이러한 활발한 接觸과 交流에도 불구하고 1992년 양국간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중요한 障礙要因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다. 북한은 핵문제를 이용하여 미국과의 직접협상(平和協定締結, 「對北核不使用宣言」)이나 한·미와의 3자회담을 기도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의 先 核査察 수용 및 핵재처리시설의 폐기로 맞서고 있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부시 미대통령의 전술핵 철거 선언(9. 27),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상응하는 조치 발표(10. 5), 노

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선언」(11. 8)으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외교부 성명(11. 25)을 통해 「비핵화 선언」이 「비핵지대화선언」 주장과 일부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을 위한 南北協商을 제안하고, 미국이 核武器 撤收를 시작하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第5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한국이 남북한 동시 核査察을 제의함에 따라 북한은 핵사찰 거부명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경제난 극복과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해 對日 關係正常化, 對美 關係改善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이 핵안전협정체결과 핵사찰 수용을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바, 북한으로서는 1992년초에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선까지는 양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핵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올 경우, 미·북한 접촉수준은 현 참사관급에서 대사급 또는 부대사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이며, 접촉장소 또한 북한이 유엔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한 만큼, 베이징에서 북한의 유엔 대표부가 상주하는 뉴욕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1992. 2월 예정)에서 核安全協定에 서명한 이후에도 국내 批准節次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핵재처리시설 폐

기에 대한 확고한 전망이 서기 전에는 미·북한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 國際機構와의 協力關係

1991년 8월 8일 유엔 安保理에서 남북한 유엔가입권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북한은 유엔의 正式會員國이 되었다. 북한은 유엔가입 이전에도 1973년 9월 5일 유엔주재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고(한국, 1951. 11. 6 설치) 옵저버자격으로 유엔에 참여하여 왔다. 북한이 가입한 유엔관련기구는 1991년 말 현재까지 모두 12개로 이중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인 유엔통상개발기구(UNCTAD)를 제외한 나머지 11개는 모두 유엔전문기구이다.¹³⁾

이밖에도 북한은 유엔총회 또는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의 경제·사회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은 북한이 가장 활발한 접촉을 갖고 있는 유

13) 북한은 197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한 이후 같은 해 7월 유엔 통상개발기구(UNCTAD)에 가입한 데 이어 만국우편연합(UPU, '74. 6),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74. 8),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74. 10), 세계기상기구(WMO, '75. 5), 국제전기통신연합(ITU, '75. 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77. 9), 유엔식량농업기구(FAO, '77. 11),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80. 2), 국제해사기구(IMO, '86. 4),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86. 12) 등에 가입했다.

엔관련기구일 뿐 아니라 북한에 常住代表部를 설치(1980년 12월)하고 있는 유일한 유엔傘下機構이다. 북한은 1979년 6월 유엔개발계획에 참여한 이후, 이 기구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제1단계 국가계획사업(1982~1986)을 수행한데 이어 현재 제2단계 사업(1987~1991)으로 2천 1백 66만달러를 지원받아 농수산업, 공업, 과학기술, 보건 등 7개분야 45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은 1991년 7월 30일 북한에 대해 제3단계 국가계획사업기간(1992~1996)에 2천 1백 74만 2천달러를 지원하여 天然資源의 관리 및 環境改善,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國際經濟協力事業을 중점 추진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유엔개발계획은 최근 북한의 두만강유역 經濟特區建設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¹⁴⁾

1991년중 북한은 제85차 IPU총회를 유치(4. 29~5. 4)하였고 7월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通商開發機構 아시아지역회의에 참석, 開途國모임인 77그룹의 제 7차 아시아지역 각료회의를 평양에 유치(9. 10~12)하였으며 9월 1일에는 아

14) 유엔개발계획은 두만강유역개발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 1차 유엔개발계획 동북아시아 협력사업추진회의('91. 7. 6~7. 7), 평양에서 제 2차 유엔개발계획회의('91. 10. 15~10. 21)를 주관했으며 1992년 1월말경 서울에서 「두만강개발계획위원회(PMC)」구성을 위한 제 3차 유엔개발계획회의를 주관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개발계획은 「동북아경제기술발전 국제회의」('91. 8. 29~8. 31)를 중국 길림성 장춘에서 중국 아시아 태평양협회(API), 미국 하와이대 동서센터(EWC)와 공동주관하였다.

시아太平洋地域放送聯盟(ABU)에 가입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1년 8월 중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開發銀行(ADB)본부에 이 기구의 가입자격, 절차, 출자규모 등을 문의하는 한편, 아시아개발은행의 借款 供與實績 등 각종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북한은 1991년 11월 유엔亞太경제사회이사회에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여 큰 변동이 없었던 1992년 4월 14일 북경에서 열리는 48차 총회에서 50번째 정회원으로 가입할 것이다. 북한이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에 가입하면 亞太지역에서 남북한이 함께 회원국이 되는 최초의 地域協力機構가 된다.

이와같이 북한이 최근들어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를 이용한 국제협력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外交的 孤立에서 탈피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북한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써 한국이나 일본 등 西方國家들로부터의 직접적인 資本 및 技術 導入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경제지원 협조가 체제유지상 유리하고 특정국가에 대한 經濟的 對外從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이렇게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통제된 개방」형태이지만 대외경제에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인 바, ADB, IMF, IBRD 등과 같은 國

國際經濟協力機構에도 조심스럽게 가입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핵사찰 문제 등을 포함한 對美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IMF나 IBRD 등과 같이 미국의 影響力이 강한 國際機構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미국의 측면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3. 對南關係

1980년대말 이후 북한은 소련 및 동유럽권의 변혁, 非同盟國家들의 脫理念·實用主義 路線으로의 선회, 가중되는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국제 혁명역량과의 연대성」강화를 위한 활동보다 남한내의 民主化過程에서 과생되는 정치·사회적 불안을 이용하는 「남조선 혁명역량」강화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북한의 對南戰略은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대남 顛覆戰略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남북대화에 임하면서도 주변정세 변화에 부응한 偽裝平和攻勢를 강화하는 등 和戰兩面の 二重戰略을 구사하여 왔다. 북한은 김일성의 1991년 「신년사」를 통하여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는 등 統一戰線戰術에 입각한 기존 대남전략을 고수하였다.¹⁵⁾

15)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1990. 5. 24)에서 김일성이 행한 시정연설에서도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를 통하여 조

또한 김일성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
 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과 행한 담화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8. 1)를 통하여 統一戰線戰術에 입각한 통일우선주
 의를 강조하고 주한미군 및 핵무기철수, 비핵지대화 등 對南
 攻勢를 강화하였다. 북한 정권수립 43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행한 박성철 부주석의 보고(9. 9)에서도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 전제와 본질적 내용으로서 「민족대단결」이 재차 강조되
 었다. 북한이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는 것은 韓國社會의 混亂과
 國論分裂을 조장하여 이를 반정부투쟁과 연계시키기 위한 의
 도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1991년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전술은 한국 국내 반정부 인사 및 해외교포들에 대한 반정부
 투쟁 선동에 중점이 주어졌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윤기복을 의장으로 하는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
 측 본부」를 결성(1. 25)하여 「범민련」('90. 11. 20 결성)을 지
 원하는 한편, 「범민족대회」추진 등을 통해 한국정부와 재야운

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이중 제 5 항이 「전민족적인 통일 전선의 형
 성」이다. 김일성은 통일전선 구축에 대해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단체들과 조직들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 각계층 인사들을 망라
 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북측 준비위원장 박성철은 '90. 7. 14 남북 각각
 50명 내외의 당국 및 정당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8월
 15일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동권간의 갈등을 유도하고,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성사를 위한 組織體系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노동당·사민당·천도교·청우당 공동명의로 한국의 3야당에 평양초청 편지를 전달(2. 8)하였고, 한국내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기 위해 북한은 3월 23일 실시된 한국의 지방자치제 선거를 「팻쇼 대 민주」, 「예속대 자주」의 대결장으로 규정하면서 재야 및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모든 민주세력이 연대하여 격렬한 反政府·反美鬭爭을 전개할 것을 선전·선동하였다. 또한 북한은 남한내 운동권 및 반체제 세력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연대성」을 강조하여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對南暴力革命을 유도하려 하였다. 이는 명지대 강경대군 사건(4. 26)과 관련한 반정부투쟁 선동,¹⁶⁾ 「임수경 석방투쟁위·문익환 구원대책위 연합회의」 개최(6. 30), 「조선교육문화일군직업동맹」의 全教組와의 대회제의(8. 1), 평양시 노동자대회(8. 7)에서의 남측 노동자들에 대한 반정부 투쟁 선동, 「제 2차 범민족대회」를 위해 입북한 전대협 소속 성용승·박성희 등을 내세운 反韓·反美宣傳, 韓半島 非核地帶化·不可侵宣言 採擇을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 결의모임」 개최(9. 17), 남북대학생 교류 동의(9. 24), 서울대 대학원생 사망사건(9. 17)을 계기로 한 평양시 群衆大

16) 북한은 강경대 사건과 관련, 선전매체와 각종 단체 성명 및 규탄집회 등을 통해 한국정부를 반민족적인 폭력정권으로 비난하면서, 2개월간에 걸쳐 반정부투쟁을 선동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 「5. 9국민대회」 시위 사태에 이르는 기간중 성명 7회, 집회 6회, 신문방송 보도 400여회를 통해 대남선동을 격화시켰다.

會 및 각종 糾彈大會 開催 등을 통하여 계속되었다.

또한 北韓은 해외동포에 대한 宣傳·煽動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는 제 2 차 「범민족대회」 개최(8. 15), 「조선 통일지지 국제연대성 행진대운동」 개최(9. 29~10. 4) 및 文鮮明 統一敎主와의 「10개항의 공동성명」 발표(12. 5) 등이다. 특히 「범민족대회」에 대해서는 「민족의 통일축전」이라고 미화하고, 「민족단합의 대회」, 「통일의 대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선전하며, 남한 당국을 反統一 分裂主義, 反民族·反對話 勢力이라고 매도하였다. 이러한 「범민련」 및 「범민족대회」를 통한 北韓의 宣傳·煽動은 남한내의 반정부세력 및 해외의 친북세력을 결집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평화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남전략의 측면에서는 통일전선 형성 및 사회혼란 책동을 일층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된다.

한편, 北韓이 第 5 次 南北高位級會談(1991. 12. 10~13)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것도 기본적으로 국제적 고립 탈피와 체제붕괴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바, 1992년에 북한은 고위급회담을 지속하면서 스포츠단일팀 구성, 경제교류 확대 등 남북관계의 조정을 모색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僞裝平和攻勢와 統一戰線戰術을 통한 「남조선혁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대남전략을 쉽사리 수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金日成·金正日 체제유지 명분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남북관계개선이 북한의 개방과 체제붕괴와 연계

된다는 기존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대남전략 기초의 근본적 수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한국내의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시위를 「남조선 혁명역량」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統一戰線戰術에 입각한 「남조선 혁명」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992년에는 한국의 4대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기초자치단체장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북한의 對南 宣傳·煽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4대선거 기간에 각종 매체를 통하여 반정부·반미 투쟁을 학생운동권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한편, 勞動·農民運動의 組織化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범민족대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한 統一戰線事業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1991년 들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80. 10. 10 제안)의 부분적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여 왔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의 실현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연방국가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 후 점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⁷⁾ 이후 손성필('91. 3), 정준기('91. 4. 8), 윤기복('91. 5. 3),

17) 김일성은 1990. 10. 18 제 2차 남북고위급회담 한국측 대표단과의 회견시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강조하였다.

한시해('91. 6. 2) 등 北韓 高位管理들이 지역정부의 國防·外交·立法·經濟業務 수행과 미국의 초기 연방제 적용 가능성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北韓의 聯邦制案 수정 가능성 시사 동향은 韓·蘇 修交, 韓·中 貿易代表部 相互設置 등 국제정세가 남한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한 교차승인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 부여, 국방·외교·입법권의 지역정부 관장」 등의 언급은 북한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우려하여 聯邦制案에 국가연합적 성격을 포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체제유지 차원에서의 연방제안 수정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남북한 정부당국간 대화를 지속하면서도 大民族會議, 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 政治協商會議 등 군중집회성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綜合적으로 볼 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9.17)되고 第5次 高位級會談에서 단일합의서가 채택되었다고 하여 북한의 기존 대남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이 유엔동시가입을 「두개 조선」 정책에 의한 韓半島 分斷의 固着化라고 비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이 「하나의 조선」 정책의 부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지표라고 간주될 수는 있을 것이나, 북한이 유엔가입을

「일시적 난국 타개조치」로서 「하나의 조선」 정책의 변화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¹⁸⁾ 북한의 대남전략이 수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한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외교적 고립 탈피책의 일환으로 제5차 고위급 회담에서 전향적 자세를 취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單一合議書가 채택된 사실 하나만을 근거로 북한의 대남전략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1992년도에도 한국과의 당국간 대화를 지속하면서 남북대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국제적 고립 탈피를 모색하는 동시에,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우려하여 體制維持的 次元에서 統一戰線戰術에 입각한 대남 선전활동은 여전히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8) 1991년 5월 27일 외교부 성명, 9월 18일 외교부 성명, 10월 2일 연행목총리의 유엔총회 연설 참조. 특히 연행목총리는 “조선의 북과 남이 오늘은 비록 각각 유엔에 들어왔지만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 인민은 민족의 대단결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며 유엔에서 하나의 의석을 가지고 인류의 공동위업에 기여하게 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Ⅲ. 南北韓關係

1. 政治·軍事 分野

가. 和解와 共存關係

남북한은 1989년 2월 28일~1990년 7월 26일 8차례의 豫備會談과 2차례의 實務代表 接觸을 통하여 甞방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는 南北高位級會談을 개최하여 「남북간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를 협의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따라 1990년 9월 4~7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 1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측은 상호체제 인정·존중을 강조하면서 교류·협력과 政治·軍事的 信賴構築의 병행 추진을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하나의 조선」을 강조하면서 3개항의 긴급문제 선결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주장함으로써, 남북한은 접근방법상의 異見을 노정하였다. 1990년 10월 16~19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제 2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甞방의 제안을 合意書 형태로 구성한다는데는 합의하였으나 역시 접근방법상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1990년 12월 11~14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 3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는 제 4차 회담개최일정('91. 2. 25~27, 평양) 합의 이외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북한은 1991년 2월 25~27일로 예정되어 있던 4차회담을 한·미연례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연기하였고, 이후 甞방간에 합

의된 8월(27~30 예정)의 회담일정도 소련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자 事態進展을 觀望하기 위해 다시 연기하였다. 1991년 10월 22~25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긴급제안하는 동시에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 「북남화해와 협력·교류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을 주장하다가 統合案으로써 「북남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 채택을 제안하였고, 한국측은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제안하였다. 다만 남북고위급회담시 북한측이 合意書 草案에서 법률적·제도적 장애조항을 스스로 삭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조항과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파괴·전복행위 금지조항을 신설·부가하는 등 종래와는 다른 입장을 취함으로써 남북한간에는 단일문건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할 것과 「서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의 순으로 合意書 내용을 구성할 것, 판문점 대표접촉을 통해 合意書의 文案을 調整할 것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쌍방은 12월 10일~13일간 서울에서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991년 12월 11일~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은 제 4차 회담까지와는 달리 남북간 잠정적 특수관계 인정, 체제인정 및 존중, 남북간 평화상태 전환,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 화해를 위한 조치들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측도 군사훈련 참관, 상주감시체제 교환 운영,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既체결 조약 협정과의 관계 등 기존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

同 合意書에서 남북은 쌍방의 관계가 統一指向過程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特殊關係임을 인정(서문)하고, 남북화해를 위해 양측이 相互體制 尊重(1조), 相互不干涉(2조), 誹謗·中傷 禁止(3조), 파괴·전복행위 금지(4조), 停戰狀態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平和狀態로 전환시키기 위한 共同努力(5조), 國際舞臺에서의 대결중지(6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향후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部隊移動과 軍事鍊習의 通報·統制,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軍人士 交流 및 정보교환, 단계적 군축 실현, 檢證 등의 문제를 협의 추진(12조)하기로 하고 軍事當局者간의 直通電話를 설치·운영(13조)하기로 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는 經濟交流·協力(15조), 言論·出版交流(16조), 離散家族 相逢과 住民往來를 포함하는 인적 교류(17, 18조), 도로연결(19조), 우편·통신교류(20조), 對外共同進出(21조) 등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고위급회담 테두리내에서 合意書 이행 준수를 위해 合意書 발효후 1개월 이내에 정치·군사·교류협력 등 3개 分科委員會를 구성하고, 발효후 3개월 이내에 南北連絡事務所(판문점), 南北軍事共同委員會,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7조, 8조, 12조, 14조, 22조, 23

조). 북한측이 제 4차, 제 5차 고위급회담에서 이상과 같이 신축적인 자세를 취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經濟難과 國際的 孤立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對日修交, 對美關係改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미·일이 대북한 관계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남북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중·소도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를 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관계 확대를 위해서라도 1992년에도 南北高位級會談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남북간에 합의한 分科委員會와 連絡事務所, 共同委員會를 발족시키는 데는 장애를 조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분과위원회는 3월 19일까지 설치가 동될 것이며 남북연락사무소와 공동위원회들은 늦어도 5월 19일까지는 설치·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각 기구 및 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 6차회담에서 협의될 것으로 보이는 바, 분과위원회 및 남북연락사무소와 공동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향후 南北高位級會談은 分野別 委員會 中心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고위급회담 자체와 그 테두리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남북간의 화해와 공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에는 몇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合意書 5조에는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평화상태로의 전환」 개념을 明示하지 않았기 때문에 南北當局間 平和協定 締結을 강조해 온 한국측 입장과 美·北韓 平和協定 締結을

주장해 온 북한측 입장이 상충될 소지가 있다. 특히 한국은 1991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하여 남북평화협정 체결 필요성과 軍事的 信賴構築 先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나, 북한은 미·북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¹⁹⁾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북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며, 남북간에는 불가침을 선언형식으로 상호 闡明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왔고, 休戰協定の 署名者가 유엔軍司令官이며 유엔軍司令官은 美國人이라는 논지에서 한국이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²⁰⁾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협조하에 한국의 當事者資格 確認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으

19) 북한은 1974. 3. 25 최고인민회의 제 5기 제 3차 회의에서 미·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으나, 1984. 1. 1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처음으로 미·북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불가침선언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이후 북한은 1988. 11. 7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제의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과 1990. 5. 24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 1차회의에서의 김일성 시정연설, 그리고 1990. 5. 31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 연합회의가 채택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및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하여 동 주장을 계속하여 왔다.

20) 북한은 한국의 남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하여 한국의 당사자 자격을 문제삼아, “우선 정전협정을 남북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평화협정」의 체결당사자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남측이 아직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형편에서는 피보호자와의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아무런 실질적 담보도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제 4차 북남고위급회담이 끝났다,” 「로동신문」, 1991. 10. 25.

나,²¹⁾ 북한은 계속하여 한국의 당사자 자격을 문제삼아 南北間 平和協定 締結을 回避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노력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기존의 이른바 3자회담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합의서 조항 중 1~4조에서 보여지는 남북화해를 위한 합의내용(상호체제인정, 상호불간섭, 비방·중상 금지, 파괴 전복기도 금지 등)의 실행과정에서 북한의 履行姿勢를 한국이 規制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공식언론채널(중앙방송, 평양방송, 로동신문 등) 외에도 對南戰略 遂行을 위해 非公式 宣傳媒體(한국민족민주전선조직의 「구국의 소리방송」)를 공공연하게 운영해 왔으나, 아직 한번도 이를 시인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1992년중 4대선거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한국정부로서는 북한이 이 放送을 통해 한국을 비난할 경우 이를 규제할 적절한 수단이 없는 상태이다. 결국 북한이 「구국의 소리」 방송, 「한국민족민주전선」조직 등 위장단체의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남북화해 및 평화공존 노력의 주장은 공념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고위급회담 진행

21) 1991년 3월 25일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임명되었으며, 1991년 10월 1일에는 미 2사단이 담당하던 판문점내 비무장지대 경비책임과 경계초소(GP) 2개소를 한국군이 인수하였다. 그리고 1992년말까지 현재 한·미 연합사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지상구성군 사령관에 한국군 장성이 보임되고, 한·미 연합사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평시 작전통제권도 한국군에 이양될 예정으로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1~1992」, p. 199.

과정에서 양측이 이 문제로 갈등을 겪을 소지가 크다.

셋째, 이와 같은 합의서 내용상의 문제점 외에도 고위급회담 진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북한의 核開發問題에서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주장하는 「조선반도비핵지대화 선언」은 미국의 핵우산 제거까지를 겨냥한 것이며 팀스피리트훈련 폐지를 유도하고자 한 것인 반면, 한국이 주장하는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92년 북한이 對日修交와 對美關係改善 등 당면목표를 남북화해 및 평화공존체제 구축과 연결시켜 核問題에 대하여 어느정도 양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韓國政府에 대한 壓力의 手段으로 핵개발을 강행하며 남북회담의 분야별 진행에 무성의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제 5차 고위급회담 合意書 채택 이후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고위급회담의 진행이 여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를 둘러싸고 남북간 비중있는 대화가 필요하게 될 경우 성사될 수 있으며, 양측의 필요에 따라서 의외로 조기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북한이 김정일의 權力承繼問題를 매듭짓기 위하여 김정일을 남북간의 정상회담 추진과정에 관여시키고 남북화해의 주도적 인물로 부각시켜 권위를 더하게 함으로써 권력승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南北頂上會談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정상회담은 회담합의사항이 구체적으로 협의되는 1992년 상반기 초에 그 성사여부가 가시화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과 함께 남북간 대화창구 일원화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주민의 자유왕래를 주장하면서 진정한 남북 주민왕래보다는 남한 내부의 반정부인사 또는 단체들의 북한접촉기회 제공 및 확대에 주력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合意書 발효후 1992년 상반기 중 合意書 실시를 위한 협의가 본격화되면 한국내에서 각계각층의 통일논의 참여 및 남북대화과 접촉 창구 다원화 요구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은 고위급회담 合意書 채택을 기화로 1992년에는 연방제 통일안과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제안을 통한 정치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 직후인 1991년 12월 15일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7.4공동성명에서 표명된 통일원칙과 고려민주연방제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 정부에 대하여 북한이 제의한 통일방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논조는 북한이 남북회담의 추진과 병행하여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운동을 전개하려는 의도를 시사하는 것인 바, 1992년에도 김일성의 1991년 「신년사」에서 제의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국정부는 合意書 採擇으로 統一意志를 대내외에 천

명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여 화해 및 平和共存體制 구축 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차적으로 성공하고 있으나, 향후 북한이 핵문제의 타결을 미루고 당국간회담 진행과 병행하여 종래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대남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론통일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나. 不可侵 및 軍縮問題

不可侵과 軍縮問題는 남북간의 최대 현안으로서 제 1차 南北高位級會談('90. 9. 4~7, 서울)이후 주요쟁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제 1차 고위급회담에서 한국은 政治·軍事的 信賴를 構築한 후 무력행사와 모든 종류의 폭력행위 포기를 포함하는 불가침약속의 기초위에서 본격적인 군축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힌바 있다. 이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의 토대위에서 실질적 군비감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단계적 접근방법은 군비통제 및 군축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으로 견지되어 왔다. 한편 북한은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군비감축을 포함한 15개항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방안을 제시하면서 美·北韓간 平和協定 체결과 南北韓간 不可侵宣言 채택을 주장하였으며 불가침의 구성요소로서 상호 무력 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 확인,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침략과 무력불간섭, 불가침 보장을 위한 남북한 군비감축과 미군철수 등을 제시하였다.

제 2차 南北高位級會談(90. 10. 16~19, 평양)에서 한국은

쌍방 모두의 성의있는 신뢰구축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하고 상호불신과 적대감이 팽배해 있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군사력부터 감축해야 신뢰가 구축된다는 북한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북한측은 제 1차 고위급회담에서 이미 제시한 불가침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7개조로 구성된 「북남 불가침에 관한 선언」을 채택·발표하자고 제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불가침선언 초안을 대폭 수용하여 「南北間의 和解와 協力을 위한 共同宣言」을 제의하였으나 고위급회담에 대한 양측의 접근방법상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제 3차 南北高位級會談('90. 12. 11~14, 서울)에서 한국은 남북한간의 불가침은 남북한간 기본관계 설정과 신뢰구축을 전제로 한 쌍방의 의지와 확고한 보장장치가 수반된 불가침이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제 1차 고위급회담시 제의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기본으로 한 구체적인 불가침보장방안을 비롯하여 정치군사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할 8개항으로 구성된 「南北不可侵에 관한 方案」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불가침선언 자체가 쌍방의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보장장치의 필요성을 거부하면서 제 2차 남북고위급회담시 제의한 「불가침 선언」에 남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혼합한 「북남 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자 제의하였다.

제 4차 南北高位級會談('91. 10. 22~25, 평양)에서 남북한은

단일문건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는데 합의하였지만 불가침 및 군축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제5차 南北高位級會談('91. 12. 10~13, 서울)에서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병행추진입장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군사 훈련참관과 상주감시체제교환 운영을 거부하는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였으며, 북한도 구체적인 불가침 보장조치를 협의하는데 동의하는 등 쌍방의 양보하에 남북한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다.

향후 남북한 군비통제협상은 同 合意書의 남북불가침의 이행 및 보장과 관련하여 진행될 것이다. 6개조로 구성된 「남북 불가침」부분에서 양측은 무력불사용(9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10조), 불가침 경계선(11조),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12조),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13조), 南北軍事分科委員會 구성(14조) 등에 합의하였다. 특히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남북한은 合意書 발효후 3개월 내에 南北軍事共同委員會를 구성하여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한이 合意書에 서명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문제에 대한 협의의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침의 이행 및 보장방안이 조기에 일괄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국은 기본적인 신뢰조성을 위해 신뢰 구축방안의 우선 합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으로서는 6·25 침략에 의한 개방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침 보장 방안중 개방의 요소가 강한 군사정보교환이나 검증문제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軍縮優先討議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이러한 군비통제 및 군축에 대한 접근방법과 시각의 차이가 향후 협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불가침 이행 및 보장을 둘러싼 협상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개별적인 불가침 보장조치들도 하나의 조약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협상을 통해 개별 현안을 條文化하는 데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2년 중에는 양측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직통전화설치나 군고위인사의 상호방문 등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개방의 여파는 적으나 상징성이 큰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 核問題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에는 가입했으나 18개월내에 받아들이기로 되어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을 거부하여 왔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의 핵무기개발 현황이 공개되면서 국제원자력기의 핵사찰도 핵무기 개발을 강

행하려는 국가에게는 적절한 억제장치가 될 수 없다는 국제여론속에서 1991년 중에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마저 제기됨으로써 핵사찰수용조차 거부하는 북한의 태도는 동북아 안보에서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북한은 1991년 7월 15일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협정 표준문안에 합의했지만 정식서명을 거부한 채, 핵시설에 대한 사찰수용을 주한미군 및 핵철수와 연계시킬 의도에서 제 4차 南北高位級會談(10. 22~25, 평양)에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제의하였다. 同 선언은 북한이 1991년 7월 30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발표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제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핵무기의 生産·所有·搬入과 핵무기적재 가능한 항공기·함선의 영토 通過·着陸·寄港 뿐 아니라 핵우산을 제공받는 협약이나 핵무기가 동원되는 일체의 군사훈련의 금지를 주장하였으며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를 위한 공동노력과 同時核査察을 촉구하였다. 同 선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서, 이는 韓·美 相互防衛條約의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수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북한 동시핵사찰을 주장함으로써 핵사찰수용 지연의 명분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부시 미대통령의 전술핵 폐기선언(9. 28)과 고르바초

프 대통령의 상응하는 조치(10.5) 등 국제적인 전술핵군축 분위기속에 주한미군의 핵철수가 기정사실화되고 NCND 정책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한국은 「韓半島 非核化와 平和構築을 위한 宣言」(11.8 노태우 대통령)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노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핵무기의 製造·保有·貯藏·配備·使用을 금지하고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며 화학 생물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한국이 공식적으로 표명한 최초의 핵정책이었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로써 한국은 그간 핵문제에 관해 미국의 NCND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북한과의 대화에서 수세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탈피, 핵문제에 관한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대통령이 제46차 유엔총회('91. 9.24)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처음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남북한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당사자간의 직접협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압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

제5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북한은 제4차 고위급회담시 제시했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수정없이 제시하였고, 한국은 노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선언」에 남북한 쌍방의 동시핵사찰조항을 추가하여 「南北 非核化

共同宣言」을 제의하였다.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는 별도로 남과 북의 모든 군사 및 민간시설, 핵관련 물질과 장소에 대한 쌍방 합의하의 사찰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한 시범적인 조치로 남북한간에 핵재처리시설 폐기에 관하여 합의한 후 1992년 1월 31일까지 상호 상대방이 선정하는 자기측 지역의 군사 및 민간시설(북한의 영변핵시설과 순천비행장, 남한의 군산비행장이나 기타 북한이 정하는 군사·민간시설)에 대한 同時査察實施를 제의하였다.

결국 남북한은 合意書 타결과 핵문제를 분리시켜 1991년 12월중 별도의 대표접촉에서 핵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내외의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하였다. 북한의 핵사찰 문제가 합의서 채택과 더불어 일괄 타결되지 못한 이유로 다음 몇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동시시범사찰 제안에 대해 준비가 없었던 북한이 同제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둘째,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한의 合意書 도출이 우선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상호의견이 대립되어 있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사안인 핵문제 논의를 일단 뒤로 미루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핵문제를 남북정상회담에서 타결하기 위해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 5 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를 타결짓지 못한 데 대한 美·日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자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한 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

는다”고 함으로써 「한국내 핵부재」를 선언했다. 이로써 1991년 12월 하순 개최예정인 대표접촉에서의 핵문제 협상이 급진전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셈이며, 핵문제협상의 진전속도는 제 6차 南北高位級會談 뿐 아니라 1992년의 남북대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 극복과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하여 對日수교와 對美 관계개선을 조속히 실현시켜야 할 절박한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은 美·日 양국이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핵사찰에 대해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한반도내 핵부재」가 공식 선언된 상황에서는 북한도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와 제 6차 南北高位級會談이 열리는 1992년 2월까지의 일차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제적 비난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동시사찰문제와 핵위협제거를 협의하기 위한 美·北韓協商을 주장(12. 2, 12. 7 북한외교부 대변인 성명)하고 있는 사실과, 군사기지를 어느 정도 자세히 검사할 것인가 하는 세부 기술적인 사찰문제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사찰은 1회 실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 사찰실시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제 5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한국이 제의한 상호동시사찰이나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사찰이 실현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 交流・協力分野

가. 經濟分野의 交流・協力

1988년 10월 4일 한국정부가 「7.7 특별선언」의 經濟分野 後續措置로서 「남북물자교류 지침」을 발표,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대북 교역의 문호개방조치를 취한 이후, 남북간 交易規模가 꾸준히 成長, 1991년(1~11월) 중 1억 7천만달러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한국은 소련,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북한의 제5대 交易對象國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그 동안 물자교류의 내용을 볼 때 북한은 아연피, 무연탄 등의 1次産品을, 남한은 섬유제품, 칼라TV 등의 工産品을 주로 반출하였다는 점에서 남북교역이 상호보완적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남북교역에서 한국의 반입규모가 반출규모보다 절대적으로 큰 것은 북한이 외화부족과 정치적 이유에서 한국상품의 유입을 기피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1년 남북한 교역은 홍콩·일본 등 제3국을 통한 間接交易이 主流를 이루고 있으나, 점차 間接交易과 直交易이 並行 推進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1991년 4월 10일 한국의 천지상사와 북한의 조선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 사이에 남한은 쌀을, 북한은 無煙炭 및 시멘트를 搬出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남북교역사상 처음으로 直交易이 成事되었다. 그후 11월 11일 남북양측이 금성상사(한국)와 조선용남화학합영회사(북

한)가 칼라 TV, 설탕, 저밀도폴리에틸렌 필름과 無煙炭을 상호 求償貿易形態로 교환하고, 삼성물산(한국)은 조선신고무역주식회사(북한)로부터 무연탄을 반입하되 그 대금 2백 80만달러는 제 3 국 은행을 통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직교역을 허용함으로써 남북간 直交易은 점차로 增大되어 가고 있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표 4〉 연도별 남북간 교역 승인현황

(1988. 10~1991. 11)

	연 도	건 수	상사수	품목수	금액(천달러)
반 입	'88	4	4	16	1,037
	'89	57	47	53	22,235
	'90	75	60	88	20,354
	'91(1~11)	300	214	184	152,903
반 출	'89	1	1	1	69
	'90	4	4	4	4,731
	'91(1~11)	27	12	49	18,694

자료 : 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 5 호, p. 12.

1991년 남북한 경제교류에서는 상품교역 이외에도 注文生産이 성사되었고 남북한 합작투자의 가능성이 타진된 바 있다. 코오롱은 5월말 양말機械 및 原料를 북한에 提供하고 생산된 양말을 유럽공동체지역으로 輸出, 대금을 정산하는 注文生産을 성사시켰다. 한편 1991년 중 30餘個의 國內企業이 북

한과 합작공장 설립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합작투자는 아직 한건도 성사되지 못하였다. 또한 한국정부도 북한에 대해 合作投資(6. 28), 金剛山共同開發(8. 9), 水資源 合作開發(10. 12), 간접교역의 直交易으로의 전면적 轉換(10. 23), 非武裝地帶共同開發(10. 23), 북측 동해안합작공단 건설(10. 23) 등을 북한에 제의하였으나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91년 7월 7일 처음으로 유엔開發計劃이 주관하는 豆滿江流域開發計劃 참여의사를 밝히고 북한지역의 經濟特區開發에 한국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북한은 두만강유역 개발계획과 관련, 남북 쌍방에 의한 合作開發보다는 중국, 소련, 일본 등을 포함한 多者間 合作開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유엔개발 계획의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의 參與與否와 方法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92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개발계획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남북양측은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경제교류와 관련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제15조)할 것에 합의하였다. 남북한은 합의이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1992년 5월까지 발족될 예정인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에서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1992년 상반기에 南北經濟交流 및 協力關係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기보다는 남북 쌍방간에 實務協議가 진행되어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난후 下半年期부터 可視的인 成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2년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북한·일본의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의 對北賠償이 북한의 經濟難을 輕減시킴으로써 남북경제교류가 일시적으로 遲延될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다.

韓國政府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남북교역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차상품의 導入先을 북한으로 轉換시켜 농수산물, 광산물, 중간재 등을 북한으로부터 搬入하고 생필품, 자본재 등은 북한으로 搬出할 것을 북한에 제안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제도상의 문제점을 북한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남북경제교류 및 협력의 일환으로 陸·海·空路 開設, 共同自由市場開設, 資源共同開發, 北側 西海岸大陸棚 石油 및 天然가스의 共同開發, 아연·석회석 등 지하자원 공동개발, 시베리아·북한·한국을 횡단하는 送油管連結 및 가스管 共同建設事業, 交通通信網 連結(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외국인의 南北直接往來 허용, 설악산·금강산 공동개발 등을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교류확대를 위한 선결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가격 결정, 결제통화, 수송, 관세부과문제 등은 남북경제교류·협

력공동위원회에서 비교적 쉽게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84~1985년 5차례의 南北經濟會談을 통하여 가격결정은 去來當事者間 合意로, 決濟通貨는 스위스프랑으로, 물자교류를 위한 輸送手段은 京義線으로, 남측은 인천·포항, 북측은 남포·원산을 開放하고 關稅는 賦課하지 않는다는 데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남북간 교역확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신용장거래와 代金決濟를 위하여 양측 은행사이에 체결되어야 할 코레스契約(外換去來契約)이다. 1992년 중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열리면 여기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²²⁾

그러나 1992년 남북합의에 의하여 交易形態가 直交易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어려운 外換事情, 産業構造, 交易品目 등을 고려할 때 求償貿易과 신용장개설의 결제방법만으로는 南北交易을 活性化시키는데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決濟方法으로서 과거 동서독간에 운영되었던 것과 유사한 清算計定의 개설이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고위급회담의 合意書 채택과정에서 북한이 「개방」이라는 문구삭제를 요구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개방이

22) 남북이 합의에 도달해야 할 사항은 남북교역을 국제교역이 아니라 내부교역으로 상호 인정하는 것인 바,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남북간 교류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 양측은 남북교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다.

體制에 미칠 否定的 影響을 우려하여 점진적 방식으로 南北經濟交流 및 협력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2년 남북경제교류 및 協力은 북한의 체제붕괴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지 않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남북한 합작투자가 성사될 경우에도, 북한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지정학적 입지를 갖춘 北韓 西海岸大陸棚의 石油 및 天然가스開發, 豆滿江特區開發, 경기도 일원의 非武裝地帶 共同開發 등의 사업이 우선적으로 推進될 可能性이 있다.

나. 體育交流

1990년에 北京 아시안게임에서 남북한 共同應援과 체육관계자간의 接觸을 통해 분단이후 최초로 평양('90. 10. 11)과 서울('90. 10. 23)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가 열렸고, 1990~91년에는 4차례의 체육회담을 통하여 남북한은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4. 24~5. 6)와 제6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6. 14~30)에 단일팀을 출전시켰으며, 남북한 축구선수들이 남북을 오가며 2차례의 評價戰(서울 '91. 5. 8, 평양 '91. 5. 12)을 가지는 등 남북체육교류는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특히 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한과 북한이 「코리아」를 團名으로, 한반도지도를 團旗로, 1920년대의 아리랑을 단가로 하여 분단후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하여 국제체육경기에 참가함으로써 남북체육교류는 물론 國際舞臺에서의 協力可能性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교류이외에도 남북체육관계자들의 접촉·교류가 증대되어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체육분야의 남북인적교류를 보면, 1990년에 15건이 신청되어 15건 승인에 1건이 성사되었으며, 1991년에는 10월말까지 22건이 신청되어 21건 승인에 6건이 성사되어 총 46명이 북한 체육인과 접촉하였다.

그러나 북한 柔道選手 리창수의 歸順('91. 8. 4)이후 남북체육교류는 일시 膠着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예컨대 91년 전반기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한국이 각종 國際大會에 남북단일팀을 출전시키기 위하여 第5次 體育會談 再開를 수차례 북한에 제의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南北體育會談마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5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특히 제 5차 南北高位級會談 기간 중 남북한이 막후접촉을 통해 南北體育會談을 1992년 1월 속개하자고 합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바, 92년중 남북체육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체육회담이 재개되면 남북한은 92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單一팀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북한의 主張²³⁾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바르셀로나올림픽 단일팀 구성 가능성은 높다

23) 남북선수의 동수선발, 남북공동 단장제 운영, 남북왕래 훈련 등.

고 할 수 있다.

올림픽 단일팀 구성이 성사되면 1992년 中半期에 種目別 評價戰을 위한 남북간 相互往來가 잦아질 것이며, 이는 他 分野의 南北 交流·協力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이 제안한 남북한 競技相互開催, 大學間 親善競技, 統一蹴球의 定例化, 국제경기 南北共同開催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 文化·學術分野의 交流·協力

문화·학술분야의 南北交流는 남북 이질화 극복과 상호 신뢰조성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북한의 「先 政治·軍事問題 解決 原則」과 남한의 「交流를 통한 信賴構築 原則」이 대립되어 그 실적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1989년 6월 12일 한국정부가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표 5〉 문화·학술분야의 남북인적교류

(1990. 1~1991. 10말)

연도 \ 분야	학 술	문화·예술	종 교	언 론	합 계	
1990	성 사	14	4	2	4	24
	참가인원	193	50	51	22	316
1991	성 사	22	6	19	13	60
	참가인원	444	205	76	40	765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지침」을 발표한 이후 정부를 비롯, 학계, 문화계의 활발한 노력으로 1990년에는 24건이 성사되어 총 316명이 교류하였고 1991년에는 60건이 성사되어 765명이 교류하였다.

1991년 문화·학술분야 접촉·교류의 내용을 보면, 덴마크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CISO) 정보처리 표준화위원회」(5. 23~6. 2)에서 남북당국자들이 한글 로마字表記 單一案을 마련하였으며, 중국 延吉에서 열린 「한민족과학기술자 학술회의」(8. 19~22)에서 과학 기술부문의 남북전문가들이 첫 교류를 가졌다. 學生들간의 板門店 接觸(8. 12, 9. 4)에 이어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女性討論會」(11. 25~30)에 3명의 北韓女性代表가 참가한 바 있고, 宗教分野에서는 曠新희牧師가 국내거주인사 자격으로서는 처음 訪北하였으며(9. 24~10. 1), 미국 로스엔젤레스 등지에서 남북한 佛敎指導者들이 「한민족 불교자 연석회의」(10월)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세계청소년축구 남북단일팀 평가전이 南北韓 直接 中繼됨으로써(서울 5. 8, 평양 5. 12) 남북의 放送交流도 성사되었다.

그러나 남북간 문화·학술교류는 전반적인 增加趨勢에도 불구하고, 交流方式面에서 남북양자간의 直交流가 아니라 국제기관이나 해외동포들이 주최한 第3國에서의 國際文化行事나 學術會議에의 참가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北韓人士들이 참석을 약속했던 제3국 개최 國際文化行事나 學術會議에 不參하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민족철학자대회」(8.

21~24)에 북한학자들이 참가를 약속함으로써 한반도내 남북간 첫 학술 직교류가 기대되었으나 北韓의 不參으로 남북간 學術 直交流는 霧散되었다.

한국정부는 문화·학술교류에 있어서 人的 交流 擴大에 중점을 둠으로써 북한사회의 閉鎖性과 硬直性을 이완시켜 북한사회의 開放을 유도한다는 정책을 취해왔다. 정부는 1991년에 그 구체적인 조치로서 大學生들의 北韓訪問과 大學新聞記者들의 訪北取材를 주선하였고, 교수와 대학생들의 海外研修對象 地域에 북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 5기 출범회의 개회사(7. 12)에서 남북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남북학자, 전문가들간의 「民族文化共同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제의했으며, TV·라디오 放送의 開放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제안들에 대해 북한은 在野團體나 人士 중심의 교류만을 허용함으로써 남북 문화·학술교류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 교류·협력분야에서 과학·기술, 예술, 체육, 신문, TV, 잡지 등의 상호교류·협력(제16조), 남북교류·협력 분과위원회(제22조) 및 부문별 공동위원회(제23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류·협력분야의 分科委員會와 共同委員會가 설치·가동되면 남북한 당국간에 문화교류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문화교류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合意書」에 의하면 공동위원회구성이 合意書 발효후 3개월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위원회에서의 합의도출 이후 文化交流가 擴大될 수 있는 시점은 1992년 下半期 이후로 전망된다.

남북한은 신문, 라디오, TV 등의 교류확대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이 언론·방송교류의 전면 확대에서 파급되는 北韓社會의 開放을 우려하여 협상과정에서 「개방」대신에 「교류·협력」이라는 표현을 固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이 분야의 교류를 상당 기간 지연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1992년에는 신문, 라디오, TV를 통한 相互誹謗·中傷 中止(제3조)조항 실행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유지에 부담이 적은 부문인 과학·기술, 전통예술, 민속학, 순수예술 등 분야에서의 교류에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대외적인 평화이미지 고양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로운 왕래·접촉(제17조)과 해외 공동협력 및 공동진출(제21조) 규정을 근거로 문화·학술분야의 교류를 對南政治宣傳的 次元에서 이용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拋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남북한 文化·學術交流가 活性化되는 과정에서 「窓口一元化」와 「多元化」 문제가 심각한 論爭의 對象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라. 離散家族問題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 7선언」, 1990년 大韓赤十字社의 高齡者 이산가족 우선 故鄉訪問 제의(1. 10, 9. 9), 노태우 대통령의 「民族大交流 宣言」 발표(7. 2), 1991년 통일원장관의 「7. 15 대북제의」 등에 힘입어 남한내 離散家族들의 訪北 申請이 활발해졌으나,²⁴⁾ 남북 이산가족교류는 아직 한정된 소수인사의 상봉차원에 머물러 있다. 북한은 91년에도 3차례에 걸친(4. 2, 8. 10, 8. 12) 한국적십자사의 會談再開要求를 拒絶하였다.

그러나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북남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초안)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제17조)을 언급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최초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북한은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18조)라고 명시하는데 동의하였다.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합의서」가 규정하고 있는 부문별 공동위원회 등 남북간 상설기구에서 다루어지게

24) 1989년 6월 이후 91년 10월 현재, 전체 북한주민접촉신청 중 이산가족 신청이 31. 8%를 차지하고 있다.

될 것이나, 현재와 같은 추세로 南北和解 霧圍氣가 진전된다면 북한이 會談의 開催에는 응해 올 가능성이 높으며, 1985년 적십자 본회담에서 남북간 교류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던 바 있기 때문에 1992년 중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부문별 共同委員會에서 그동안 북한에 촉구해 왔던 離散家族 生死確認을 위한 書信往來, 高齡者 離散家族 相逢, 省墓團 訪問, 休戰線 근처 面會所 設置 등을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일단 이러한 문제를 議題로 삼는다는 同意할 것이나 구체적인 협의과정에서 故鄉訪問團 및 藝術公演團 同時交換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서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와 관련 한국내 良心囚, 政治犯, 收監中인 訪北者, 未轉向 長期服役囚 등의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회담에 장애를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3. 國際機構에서의 南北韓關係

한국정부는 1990년 12월 20일, 1991년을 유엔加入달성의 해로 정하고 유엔加入을 위한 총력 외교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年頭記者會見(1991. 1. 8), 外務部 業務報告(1. 24),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유엔아·태 경제사회이사회총회(4. 1~10)에서 91년내 유엔加

入 實現意志를 闡明하였다. 1991년 4월 5일 노창희 駐유엔大使는 “북한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노력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금년 9월 제 47차 유엔총회 개막전에 가입신청을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覺書를 유엔安全保障理事會 公式文書로 유엔회원국들에 配布하였다.

북한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혹은 한국의 단독가입 노력에 대하여 分斷固着化를 조장하는 반민족적 책동이라는 非難 宣傳攻勢를 펴면서, 남북한 單一議席 加入을 계속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여론과 주변정세가 불리하게 변화함에 따라 유엔 동시가입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자, 결국 외교부 성명(5. 27)을 통해 유엔加入 申請決定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同時加入 申請問題를 협의하자는 남한의 제의(5. 29)를 거절하고, 김영남 부총리겸 외교부장 명의로 된 유엔加入申請書를 유엔에 독자적으로 提出(7. 8)하였다. 이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가입신청을 할 경우 그들이 반대하던 남한의 동시가입정책에 호응하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이 각기 제출한 유엔가입 신청서(북한: 7월 8일, 남한: 8월 6일)는 安全保障理事會에서 만장일치로 통과(8. 8)되고, 9월 17일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加入承認 決議案이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남북한은 유엔의 正式會員國이 되었다.

1991년 5월 27일의 外交部聲明에서 북한은 남한의 유엔단독

가입 결정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유엔가입신청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분열주의적 책동”에 대항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조치라고 주장하였고, 한시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L.A. 발언(6. 7)에서 남북한의 개별적 가입으로 남북관계가 유엔기구내에서 과거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김영남 외교부장은 컬럼비아大學 講演(9. 13)時 유엔에서 연방제사업 및 單一議席으로의 전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유엔가입 후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기자회견(9. 17)에서 남북한 개별의식의 單一議席으로의 전환, 유엔軍司令部 解體 및 美軍撤收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유엔내에서 정치공세를 전개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남북유엔가입이 유엔에서의 남북간 극한대립을 초래하여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기보다 분단을 영구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 온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92년중에는 북한이 유엔에서 協調보다는 기존의 對決姿勢를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한국은 현재 14개의 유엔傘下機構중 11개 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며, 북한은 유엔通商開發會議(UNCTAD)에만 가입해 있다. 한국은 16개 專門機構에 모두 가입해 있는 반면, 북한은 國際通貨基金(IMF), 國際復興開發銀行(IBRD), 國際開發協會(IDA), 國際金融公社(IFC), 國際勞動機構(ILO) 등 5개 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기구에 가입해 있다. 북한이 가입하지 않았거나 못하고 있는 機構들의 공통점은 借款, 援助,

金融에 관한 기구라는 점이다. 그러나 91년 중 북한은 유엔開發計劃 평양주재 직원에게 아시아開發銀行의 가입절차를 문의한데 이어서 91년 8월중 북한 대외무역은행이 아시아개발은행에 加入節次를 정식으로 다시 문의하는 등 가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빠르면 1992년 4월로 예정된 아시아개발은행총회시 가입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한국의 재무장관은 1991년 10월 16일 방콕에서 열린 IMF~IBRD 정기총회에서 북한이 장래에 IMF, IBRD, ADB 등 國際金融機構에 加入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北韓을 支援할 用意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유엔내에서의 정치선전공세와는 별개로 한국에 대하여 이들 기구에의 가입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는 “국제무대에서 대결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제 6조) 및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는 조항(제 21조)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상기 합의서의 내용과 정신을 존중하고 이의 이행에 성실한 태도로 임할 경우 1992년에는 유엔을 비롯한 國際機構에서 非政治的 分野에서의 남북간 協力은 비교적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당분

간 政治·軍事的 分野에서는 북한이 유엔軍司令部 解體 및 駐韓美軍撤收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공세를 전개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간에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정치적·군사적 사항들의 履行을 둘러싸고 異見과 對立이 노정될 경우 국제기구에서의 남북간 협력의 흐름이 저해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록 1

1991년도 主要事件日誌

1. 1 金日成, 新年辭 발표
 - 主體의 혁명노선 견지, 黨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 강조, 反帝·自主的 대외정책 견지 주장
1. 6 東歐圈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자진 解體 선언(執行 委員長 벨라 카다르 성명)
1. 8 盧泰愚 大統領, 年頭記者會見
 - 北韓의 유엔同時加入 不應時 '91년내 單獨加入 推進 표명
 蘇聯 最高會議 개막
1. 9 盧泰愚 大統領·日 가이후 總理, 靑瓦臺에서 정상회담 개최
 - 日·北韓 關係改善 관련 韓·日 5原則 再確認
 * 兩國間 사전협의, 南北交流·대화 勸案한 日·北 관계 추진, 北의 核安全協定 서명촉구, 日·北 修交 이전의 經濟·報償 不可, 北의 開放 誘導 등
 美·이라크, 제네바에서 外務長官會談 開催
 - 이라크: 撤軍거부, 부시 美 大統領의 親書 接受 거부
- 1.10 蘇聯 군사대표단(단장: 國防省 제1부상 콘스탄틴 코체토프 대장), 평양 도착
- 1.12 제2차 南北體育會談, 판문점 平和의 집에서 개최
 - 장충식 올림픽委 副委員長, 김형진 北韓올림픽委 副委員

長 등 양측 각 5명 참석

-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4월 日지바) 단일팀 참가원칙 승의

1.13 北韓 外交部 대변인, 아시아지역 安保協力機構 창설안 반대 담화 발표

- 아시아에 유럽식 안보협력기구 적용불가 주장
- 美의회, 부시 大統領의 對 이라크 武力使用權限 승인

1.16 北韓 김용순 당비서, 北京서 江澤民 中國총서기 면담

- 江澤民, 兩國間의 긴밀한 관계 강조

1.17 美國 등 多國籍軍, 이라크 공격 개시

1.21 韓國 제152회 臨時國會 개회

- 軍醫療陣 사우디 파견 동의안, 노재봉 總理 임명동의안 등 가결

北韓 經濟代表團(단장: 대외경제사업부 김정우 副部長), 獨逸 向發(1. 21~2. 12)

1.22 제 2 차 韓·蘇 政府代表團會議 폐막(1. 17~22)

- '93년까지 蘇聯에 경제자금 30억달러 제공, 사할린 석유·가스 등 7개 사업을 자원공동개발 대상으로 선정, 연내 현지합동조사, 政府간 경제과학기술협력 共同委員會 설치 등 합의, 韓·蘇 漁業協力協定 가서명

1.23 祖國統一汎民族聯合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1.25 韓·美 兩國政府, 팀스피리트 '91훈련일정 및 규모 발표

- 海外駐屯 美軍병력 1월 25일 훈련개시, 3월 중순 10일간 야외 기동훈련, 4월말경 훈련 완료
- 韓國軍·駐韓美軍·해외주둔 美軍 14만여명 참가

* '89년 29만, '90년 18만명 참가

中國, 초대 駐 서울 貿易代表府 代表에 徐大有 中國 國際商會
副會長 任命(韓國 外務部 發表)

1.26 美·蘇 워싱턴에서 外務長官 회담 개최

- 걸프전쟁, 발트연안국 사태, 美·蘇 정상회담(2월 예정)
등 협의

1.29 延亨默 北韓總理, 동남아 3국 순방차 泰國 向發

- 泰國,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순방

1.30 제 3차 南北體育會談,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

- 南側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관련 북측의 선수 합
의선발 제안 수용, 南北왕래 훈련 제안
- 北側 : 日本 전지훈련 주장

北京서 제 1차 日·北韓 國交正常化 회담 개최

- 전인철 北韓 외교부 副部長·나카히라 노보루 日 外務省
대사
- 北韓 : 日의 사죄 공식서류에 명기, 교전국간 배상형태와
청구권 함께 적용, 전후 45년간의 손실보상 등 제안
- 日本 : 과거에 대해 이미 유감표명, 日·北 관계개선과
韓·日관계는 무관, 배상 불필요, IAEA의 핵사찰 受諾
주장

金永南 外交部長, 美國과의 관계개선 희망 표명

- 나카히라 노보루 日·北韓 國交正常化 회담 日側 대표단
장 접견시 발언

1.31 蘇聯 共產黨 中央委 전체회의 개막

2. 1 韓國政府, 최근 北韓側의 韓國 쌀 10만톤 도입요청 거부방침 결정
 - 1월 중순 싱가포르 商社 통해 요청, 政府는 直接接觸 통한 교역 추진원칙 고수방침 표명
2. 4 美·北韓, 北京에서 제14차 접촉
 - 北京주재 양측 대사관 참서관급 참석
 - 美軍유해 송환·핵협정 문제 등 논의
 臺灣 國民黨 張世良議員, 臺灣·北韓間 貿易關係改善 모색위 해 訪北
2. 6 金永南 北韓 외교부장, 아프리카 각국 순방차 출국(2. 6~3. 12)
2. 8 駐 유엔 北韓부대사 許鍾, 새로 발굴된 美軍 유해 11구 송환 희망 표명(AP통신)
- 2.10 고르바초프 大統領 特使 프리마코프, 걸프전쟁 관련 회담위해 바그다드 도착
 蘇 리투아니아공화국 分離獨立 贊反 국민투표에서 91%이상 찬성(예비집계 결과)
- 2.12 제 4차 南北체육회담, 판문점 남측 平和의 집에서 진행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 선수권대회에 단일팀 구성 참가 합의
- 2.18 南北高位級會談 北側대표단, 2월 25일 예정 제4차회담 거부 성명 발표
 - T/S-'91 실시에 따른 긴장상태 조성 이유
 金永南 외교부장, 탄자니아 방문
- 2.21 체코슬로바키아, 유럽의회 가입
- 2.25 盧泰愚 大統領·獨 마이츠제커 大統領, 청와대에서 頂上會談

개최

— 盧大統領: 유엔동시가입에 대한 獨의 지지, 南北對話·北韓의 核査察을 고려한 獨·北韓관계 개선 추진 등 요청
바르샤바조약기구 軍事組織 공식해체

— 蘇·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헝가리·불가리아·루마니아 外務 및 國防장관, 상호 지원의무 폐기문서 서명

2.26 南北축구단일팀 구성 실무위원회 제2차회의,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 합의서 교환

— 5.4서울·5.8평양에서 평가전 실시, 南北왕래 인원 각 70명(보도진 각 25명), 5월 8일까지 선수 선발

— 선수단 총 62명(南北 각 31명), 선수 18명(南北 각 9명)

國際原子力機構(IAEA) 이사회,北韓의 핵사찰 거부 비난

2.27 韓國 外務部,北韓의 유엔동시 가입 거부시 韓國 단독가입 추진 성명 발표

—北韓 외교부의 유엔安保理 비망록 제출 관련

2.28 부시, 걸프전쟁 終戰 선언(對국민 TV연설)

— 休戰위해 포로 즉각 석방, 쿠웨이트 인질해방, 쿠웨이트 內 지뢰·기뢰 위치 정보제공, 12개 유엔결의안 수용, 48시간내 전후 문제협의 등 5개항 제시

피츠워터 백악관대변인, 多國籍軍 항구적 휴전위한 조건 충족 시까지 남부 이라크 계속 점령 언급

3. 3 유엔安保理, 걸프전 종전에 관한 決議案 채택

— 이라크의 쿠웨이트 合併 무효, 쿠웨이트人·다국적軍 포로 즉각 석방, 전쟁 피해 보상, 지뢰설치 공개, 유엔 12

개 결의안 수용 등

3. 5 北韓·中國·蘇聯·몽골, 平壤에서 국경무역 및 철도화물운송에 관한 협정 체결
아랍 8개국,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아랍平和維持軍」 創設合議
- GCC 6국 및 이집트 시리아 外務長官 회담
3. 7 國務會議, “統一關係 長官會議” 신설 의결
- 위원장에 副總理 겸 통일원장관, 통일 및 南北對話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조정 역할
- 3.10 北韓·쿠바, 아바나에서 軍事協定 조인
베이커 美國務, 아랍 8개국 外務長官과 리야드에서 회담
이라크 쿠르드 叛軍, 할라브야市 등 북부 6개 도시 점령
- 3.11 제 2차 日·北韓 국교정상화회담, 日 外務省에서 개최
- 기본문제·경제적 재문제·국제문제 등 논의, 核사찰·戰後 보상문제 등에서 異見 노출
베이커 美國務, 무바라크 이집트 大統領과 회담
- 아랍·이스라엘간 분쟁해결 및 걸프戰 이후 걸프지역의 안보와 협력에 대해 논의
- 3.12 베이커 美國務, 샤미르 이스라엘 總理와 중동평화방안 논의
- 이스라엘의 對아랍국가 및 팔레스타인 협상 접근방법에 합의
- 3.14 부시, 캐나다에서 멀로니 總理와 회담
- 중동평화정착방안 논의
부시, 카리브海 마르타니크섬에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大統領과 회담

- PLO의 代表性 認定問題 합의 실패
 - 3.15 北韓, 아프리카 5개국 공관 폐쇄
 - 2월초 잠비아로부터 공관철수, 최근 시에라레온·가봉·니제르 등으로부터 철수
 - 베이커 美國務, 고르바초프 蘇 大統領과 크렘린궁에서 회담
 - 3.20 부시, 바웬사에 폴란드의 對美負債중 70% 탕감 약속
 - 3.22 美 上·下 兩院, 걸프戰 지원 약속 불이행 국가에 대한 무기금수법안 가결
 - 3.25 中國, 「全人大」 제 7기 4차 회의 北京에서 開幕(3. 25~4. 9)
 - 李鵬 中國 總理, 中國의 北韓 統一方案 支持 言及
 - (「全人大」 개막 演說)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南北韓 단일 「코리아」 탁구팀 구성
 - 南北韓 각 28명(임원 34, 선수 22)
 - 유엔시, 「軍停委」 유엔군측 수석대표에 韓國軍 장성(黃源卓 육군소장) 임명
 - 3.26 政府, 차세대 전투기사업(KFP)의 주력기종으로 F16 펠콘기 확정
 - '94년부터 120대를 직구매 혹은 공동생산
 - 駐 서울 中國무역대표부 徐大有 초대대표 赴任
 - 3.29 北韓, 몰타·노르웨이 등 유럽 2개 지역으로부터 공관 철수
 - 3.31 中國 劉華秋 외교부 副部長 來韓
-
- 4. 1 UN 亞·太經濟社會理事會(ESCAP) 제47차 서울총회 개막
 - 49개 회원국 참석

- 산업구조 재조정을 위한 ‘서울실천강령’ 채택
- 4. 3 그레그 駐韓 美대사, 南北유엔 동시가입 찬성의사 표명
- 4. 4 美·日, 캘리포니아(뉴포트비치)에서 정상회담 개최
蘇聯 로가초프 外務차관, 韓國의 단독유엔가입 南北韓 관계
악화 우려 표명
러시아共和國 의회, 엘친 大統領이 요구한 非常大權 승인
고르바초프, 개혁과 탄압요구 軍部內 강경파에 유혈사태 경고
- 고르바초프, 강경파의 개혁세력 탄압요구 거부
- 4. 5 外務部, 금년 유엔總會에 가입신청 방침표명
- 安保理 의장에게 비망록 전달
- 4. 7 유엔주재 中國대표부 관리, 韓國의 유엔가입 계획에 中國의
거부권 不行使 시사
- 4. 8 盧在鳳 總理, 北韓에 제 4 차 南北고위급회담 5월 22일 再開
제의
南北 음악인 1백여명 합동공연(5. 1~5)
- 日本 후쿠이시의 「環東海 국제예술제」행사일환으로 開催
- 4. 9 그루지야共和國 최고회의 특별회의, 蘇聯邦으로부터 독립선언
의결
- 4.10 統一院, 南北韓 교역직거래 승인
- 韓國쌀 10만톤과 北무연탄 및 시멘트 물물교류
엘렌 홈즈 방위비분담문제 담당 순회대사, 韓國에 防衛費 분
담금 증액 촉구
- 4.11 北韓, 最高人民會議 제 9기 2차회의 개막
- 4.12 李鍾九 國防, 對北 核시설 응징 발언
- 4.15 크로워 前 美합참의장, 美國의 韓國 核배치 불필요 주장

- 蘇·東歐 지원위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창립
 - 韓國도 0.65% 출자
- 4.16 北韓, 韓國에 쌀 50만톤 추가도입 제의
 日·蘇, 東京서 정상회담 개최(18日~20日)
 - 고르바초프·가이후, 북방영토 반환과 對蘇 經協제공문
 제 협의
 自衛隊 해외파병 결정
 - 이케다 방위청 장관, 해상자위대에 걸프해역 소해정 파
 견준비 착수 공식지시
- 4.19 金日成, 核사찰 거부·總理會談 지속 의향표명
 日·蘇 공동성명, 남북총리회담의 지속 지지·북한의 IAEA
 核사찰 수용 촉구
- 4.20 제주도에서 韓·蘇頂上會談 개최(4. 20~23)
 - 양국 大統領, 北韓개방과 核安全協定 서명 실천위해 노
 려 합의
 - 蘇 첨단기술·韓國 생산기술 결합 韓·蘇기업합작투자
 촉진 합의
- 4.24 가이후 總理, 걸프지역 기뢰제거 위해 日자위대 掃海艇 파견
 공식 통보
 江澤民 中國 총서기, 蘇聯공식 방문(5. 15~5. 19)
 케야르 UN사무총장, 韓國의 단독 유엔가입 지지 선언
 獨, '94년까지 軍기지 1/3 폐쇄 결정
 - 38만의 蘇軍철수時 46만명의 獨逸 연방軍 37만명으로 감
 축계획 발표
- 4.25 韓·日 外務장관, 韓·美·日 3국간 차관보급 고위정책협의회

구성 합의

- 4.26 李鍾玉 北韓 부주석, 政府사절단 인솔 베트남, 라오스, 인도 등 亞洲 3국 순방
2차대전후 최초로 自衛隊 병력과 함정 6척 해외 파견
- 4.27 제85차 平壤 IPU총회 참석 국회대표단 25명, 판문점 통해 평양도착(4. 27~5. 5)
北韓, 직교역 쌀 인도 연기 요청
- 천지무역 유상열 회장, 5월 7일 목포 출항예정 쌀 5천톤 7일 이후 연기 요청
가이후總理, 아세안 5개국 순방
-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등
- 4.28 臺灣과 중국, 42년만에 첫공식 접촉
- 臺灣관영기구 海峽交流基金會 대표단, 中國관리와 1주간 회담
- 4.29 金日成, IPU개막식연설에서 연방제통일 주장
국제의원연맹(IPU) 제85차 평양총회 개막(4. 29~5. 4)
李鍾九 國防, 北韓 '93년까지 核재처리 시설 완공 전망
美 國務部·農務部, 南北쌀 직교역 중단 요구
- 4.30 美 國務部, 北韓·이라크 등 6개국 테러국가로 지목
-
5. 2 政府, 금년 9월 UN총회 韓國가입 지지 요청목적으로 36개국에 특사 파견 결정
金大中 신민당 총재, 케야르 총장에 韓國 UN단독가입 반대서한 人便으로 발송
中國共產黨 대외연락부장, 韓國단독 UN가입 반대 의사 표명

李鵬 中國 總理, 평양 방문

- 5. 3 北韓 노동당 서기 尹基福, 연방제 통일안 수정제의
 - 일정한 범위내에서 외교·군사권 보유 내용
 필리핀 美軍基地 주둔연장 협상 결렬
 야조프 蘇 國防, 中國 방문
 - 秦基偉 國防과 회담
- 5. 4 金日成·李鵬, 유엔가입 등 양국 현안 논의
 강석주 北韓 외교부부장, UN가입 신축성 시사
- 5. 6 北韓 축구단 70명 서울 도착
 - 제 6 회 세계청소년 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목적
- 5. 6 蘇·이스라엘, 外交關係 再開
- 5. 7 美 아시아협회 韓半島문제연구단, 北韓, 韓國, 蘇聯 등 5개국
 방문(5. 8~5. 29) 위해 출발
 - 단장 :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
- 5. 8 中國, 공산통치 40년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주식매입 허용
- 5.10 北韓 고위층 4명, 美중교계·대학 초청받아 첫 공식訪美
 - 北 祖平統 韓時海 부위원장 등
- 5.12 蘇, SS-20미사일 완전 폐기
 - '87년 美와 체결한 INF 廢棄條約에 근거
 고르바초프, 美·蘇 頂上會談 제의
- 5.13 재무부, 對外經濟協力基金 12배 증액 추진
 - OECD 가입여건 조성위해 '90년대 후반까지 2조 4천억
 규모
 中國·印度, 3차 국경협상 재개
 中國, 對北韓 核사찰 압력 美國 요청 거부

- 5.14 아크볼르트 터키總理, 訪韓
中國, 내년 上海에 자유무역 지구설치 발표
제네바 군축회담 재개(14日~27日)
- 5.15 가이후 總理, 韓國 유엔 先加入 지지 표명
中·蘇 2차 정상회담, 韓國 유엔가입문제논의 및 國境協定 調
印(교도통신)
江澤民 蘇聯도착, 中·蘇 정상회담
국제원자력기구, 對 이라크 핵사찰 돌입
- 34명의 核 전문가 파견
- 5.17 金宇中 대우회장, 베트남 總理 예방
교토 UN軍縮會議에 南北韓 첫 동시 참가
- UN군축회의 2차회의(27일~30일)에 南北韓이 동시에
대표 파견
中·蘇, 국경병력 減縮 합의
- 秦基偉 中國國防長官, 드미트리 야조프 國防長官과 모스
크바에서 회담
- 5.18 中國, 韓國 유엔加入 투표시 기권의사 北韓에 통보
- 5.19 駐韓美軍 7천명 철수 시작
- 非戰鬪 지원 병력
中·蘇頂上, 공동성명 발표
- 양국 共產黨이 「獨立自主, 完全平等, 相互尊重, 內政不干
涉」의 원칙에 입각 교류확대 강조
- 5.20 美·獨 정상회담, 美軍 獨逸 계속 주둔 합의
- 5.21 美 下院, 유럽주둔 美軍 15만 감축촉구안 통과
美 下院 본회의, 駐韓美軍 추가철수안 거부

- 5.22 韓·日·臺灣 3개국 농협, 쌀개방 압력 共同對應 합의
盧總理, 사표 제출
- 5.24 러시아共和國 人民代表會議, 대통령제 승인
- 찬성 894, 반대 6, 기권 16
- 5.25 몽고, 70년만에 私有化 허용
- 5.27 부시, 對中國 최혜국대우 1년연장 聲明
- 5.28 韓國 外務部, 北韓의 유엔가입 의사표명에 환영논평 발표
北韓 UN가입 결정(외교부 성명)
빈주재 田仁徹대사, 「核협정 교섭」 표명
- 5.30 韓國 國防部, 내년 國防예산 24.6% 증액 요청
- 총 9조 2천 8백 84억원 규모의 國防豫算 입안
-
6. 1 엘친, 선거공약으로 「社會主義 포기」 선언
- 國家機構의 비공산당화, 공산당 자산의 해체 및 국민자
산화 등 통해 행정·경제관리의 공산당 지배체제 타파
주장
6. 4 프랑스 議會, 6개국 공동국경조약 비준
- 프랑스·獨逸·이태리 및 베네룩스 3국간의 상호국경 철
폐 내용의 셴겐조약 비준
6. 5 南阿共, 인종차별법 폐지
- 6.13 헝가리 주둔 蘇聯軍, 46년만에 완전 철수
- 6.14 러시아共和國 대통령에 엘친, 부통령에 루츠코이 당선
- 6.15 李鵬 中國 總理, 韓半島 「한國家 두政府」 지지 표명
- 6.17 獨逸·폴란드, 不可侵協定 서명
- 6.18 베이커 美 國務, 汎대서양공동체 제의

- 6.19 유럽공동체(EC)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통합합의
 - EC 12개 회원국과 EFTA 7개 회원국 外務장관, 룩셈부르크 회의에서 통합 잠정협정 발표
 알바니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가입
- 6.20 統一院, 南北교류협력기금 '96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방침 발표
- 6.21 金達鉉 北韓 副總理겸 무역부장, 泰國 방문
 - 쌀구입과 시멘트 공급의 경제교류 광산개발 합작투자 관 심포명
- 6.23 日本, 자위대 해외파견 法案 확정
- 6.24 美 · 北韓, 유해송환 共同委員會 설치 합의
- 6.25 蘇聯 最高人民會議, COMECON 해체 공식승인
-
7. 2 蘇聯最高人民會議, 기업의 私有化 허용
 워싱턴서 韓 · 美 정상회담 개최
 - 韓半島 통일문제 집중 논의
 美 국방부, 유럽주둔 美軍 15개월내 6만 감축 발표
 北韓, 유엔가입 신청서 金永南 외교부장 명의로 제출
7. 4 오타와서 韓 · 캐나다 頂上會談
 -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 閣僚會議(APEC) 통한 양국 협 력 증진 방안 논의
- 7.10 李鍾九 國防, 北韓서 核개발 포기시 南北 「軍事査察」 용의 표명
- 7.11 훈센 캄보디아 總理, 中國 방문
- 7.15 崔浩中 副總理, 「統一大行進」 南北 공동개최 제의
 - 南北韓 및 해외동포 2천명 참여 「南北국토중단행진」 ·

「통일문제 대토론회」 개최 (8. 15~31)

- 7.16 美, 클라크 基地 포기 결정
 - 수빅만 해군기지 임대기간 10년 연장 추진
- G7, 政治·군축선언 채택
 - 정치선언: 유엔기능강화, 이라크 제재 및 중동평화회의, 對蘇 지원문제 언급
 - 군축선언: 核확산 금지조약 참여, 재래식 무기감축 문제 언급
- 7.17 北韓 직수출용 쌀 5천톤, 목포에서 1차분 선적 개시
 - 30일 나진항 도착
- 7.20 시아누크 캄보디아 최고민족회의 의장과 훈센 總理, 北韓 방문
 아세안 6개 회원국, 2000년까지 自由貿易地帶 설치 합의
- 7.22 美 國務部, 北韓人 在美가족 방문시 비자발급 입장 재확인
- 7.23 美 上院, 對中國 최혜국 대우 1년 연장 의결
- 7.25 고르바초프, 공산당 中央委에서 계급투쟁포기 선언
- 7.26 蘇 共產黨, 마르크스-레닌주의 포기를 골자로 하는 새 綱領 채택
- 7.29 蘇 15개 공화국, 「經濟聯合議定書」 채택
 - 金·硬貨 共同所有, 외채 분담상환 합의
- 7.30 北韓 外交部, 韓半島 非核 공동선언 제의 성명서 발표
 美, '95년까지 해외기지 30% 폐쇄발표
 - 현재 1천 6백개 기지중 5백군데 철수
 美·蘇정상회담 개최
 - 對蘇聯 경제개혁에 대한 미국의 지원방안, 중동평화회의

소집문제, 核무기 감축문제, 韓半島 통일문제 논의

- 7.31 美·蘇정상, START협상 조인
- ICBM 각 1천 6백기만 유지
 - 핵탄두는 각 4천 9백개로 감축
- 美·蘇, 전략무기 감축협정 조인
- 부시·고르바초프, 모스크바에서 조인후 10월에 중동평화회담 개최 합의 발표
-
8. 3 政府, 韓半島 3단계 非核정책 추진 발표
- 1단계: 北韓의 核안전협정 서명
 - 2단계: 南北韓의 非核化 공동선언
 - 3단계: 동북아의 核감축 多者協商
8. 8 北京에서 베트남·中國 外務차관 회담 개최
- 8.19 고르바초프 휴가중 失脚, 부통령 야나예프 권력 승계
- 야나예프 大統領 직무대행, 유엔 및 각국수반에 보낸 성명에서 蘇聯의 개혁포기 부인
- 8.20 EC, 對蘇 경제원조 중단
- 8.21 蘇 쿠데타 실패, 고르바초프 모스크바 귀환
- 8.23 中國, 蘇사태의 급격한 反轉에 내부강화
- 전국적으로 反和平演變운동 전개, 思想 재무장 시작
- 8.24 프라우다紙, '94년경 北韓 核보유 보도
- 8.26 발트 3국, 비자 자체발급
- 鄧小平, 蘇聯정세와 관련, 北京 일원에 1급 戰時體制令 발동
- 8.27 北韓, 신의주에서 7천여명 「金日成 父子 퇴진」요구 반체제 시위

EC 12개국, 발트3국 승인 결정

- 8.28 모스크바방송, 金正日 직책무시 「金日成 아들」로 호칭
- 8.29 北韓貨物機, 日政府 허가받아 첫 日本 취항
中國 指導部, 4개항의 對蘇관계 원칙과 사회주의 堅持 對內 5
원칙 결정(明報)
- 8.31 蘇 동독서 核 완전 철거
-
9. 1 北韓·日수교 제 4 차회담, 핵심의제 접근
- 日本側, 「청구권형식」의 경제협력방안 제안 설명
- 北韓側, 「北관할권 휴전선以北」이라는 日本側 요구 수
용태도 표명
9. 2 北韓·日本, 北京 4차 수교회담 폐막
- 經協, 관할권 문제 등 협의
- 제 5 차 회담은 11월에 개최 합의
부시, 발트3국 獨立 공식승인
9. 3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발트 3國 유엔가입 허용
메콩강유역 4개국, 11월 방콕에서 「메콩강 유역개발 회의」 12
년만에 재개
9. 4 蘇 최고인민회의, 「過渡政府時代」 선포
9. 5 中國政府, 크메르루주 지원 전면중단 발표
9. 6 政府, 발트 3국 독립 승인
- 外務部, 3개국과 조속한 시일내 修交추진 방침 발표
蘇국가평의회, 발트 3국 독립승인
9. 7 中國, 발트 3國 승인
中國當局, 「毛澤東사상」 교육강화

- 蘇체제붕괴 대응위해 국내단속 강화
- 9. 9 臺灣, 베트남과 무역사무소 교환 설치 합의
- 9.10 제 7 차 77그룹 亞洲地域 각료회의 평양서 개막(9. 10~12)
延亨默 北韓總理, 「77회의」 연설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확립
과 北南협력 강조
- 9.12 유엔安保理, 발트 3 국 가입 승인
- 9.14 蘇 太平洋 함대소속 原子力 잠수함 29척, 철강재 활용위해
해체
- 9.15 中國 신속배치軍 10개師團 창설
- 소수민족폭동과 각종 시위 대비위해 黨中央委 직속 25만
~30만 兵力을 연말까지 北京 등 배치 결정
中國政府, 증권시장 내년 開放
- 9.16 통일원, 3단계 「南北經濟共同體」 추진 발표
- 南北 교류협력 단계→南北 연합단계→통일국가수립단계
추진
필리핀상원, 수빅灣 美해군기지 연장法案 否決
오치르바트 몽골大統領 訪韓(10. 22~24)
- 9.17 南北韓 유엔동시가입
- 유엔총회 120여개 회원국 서명으로 만장일치 통과
- 北韓은 160번째, 韓國은 161번째 유엔회원국
러시아共和國, 「私有財産制」 도입
- 새헌법 초안에 市場경제·多黨制 명시
- 9.19 韓國 國防部, 관문점 美軍 10월 1일 철수 발표
- 경비병력 8백명 韓國軍으로 교체
- 9.20 EC, 「EC中央銀行」 '94년 설립 합의

- 9.22 金大中 민주당 대표,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교환 설치 제의
- 9.23 韓國 國防部, '96년까지 정규군 50만線으로 減縮 발표
- 예비군은 「동원」 2백만명 규모로 일원화
 - 각군비율도 地上軍 위주에서 재조정, 海·空軍力 강화
- 政府, 南北韓·美·日·中·蘇·몽골 참여 「동북아경제협력 체」 구성 추진
- 9.24 盧泰愚 大統領, 日 해외파병 반대 공식표명
- 韓·美 頂上會談(뉴욕)
- 蘇사태와 南北韓 유엔가입후 한반도와 세계정세 변화대응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
- 盧泰愚 大統領, 유엔총회 연설에서 南北韓 군축협의 용의 표명
- 盧泰愚 大統領, 흡수통일추진 배제표명
- 9.25 샤포슈니코프國防, 蘇軍 300만명線으로 대폭 감축계획 발표
- 蘇, 中國에 人的교류중단 통보
- 쿠데타후 첫 外務次官 회담서 일방통보
 - 錢의교부장, 訪蘇 계획 취소
- 9.26 臺灣, 北韓과 곧 직교역
- 폴리에스테르 직수출문제 협의중
- 9.27 北韓, 원자탄원료 플루토늄 이미 보유
- 李鍾九 國防, 國監 답변에서 발언
 - '92년에는 6~7개 제조분량 추출가능
- 9.29 필리핀상원, 美기지 임대연장 否決
- 아키노, 上院 결의에 지지 표명
- 9.30 北韓當局,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에 11개분야 83개 해외

합작 유치희망 보고서 제출

10. 1 판문점서 美軍철수, 韓國軍이 경비관할권 인수
UNDP, 두만강 유역 삼각주 개발계획 확정
- 北韓 先鋒市·中國 훈춘市·蘇聯 포시에트市 연결
- 「두만강 經濟特區」유력
- 경제난 타개 核査察 대책 협의 가능성
10. 3 이라크에서 不發軍部 쿠데타 발생
- 前總理 하마디도 介入, 장교 76명 처형
10. 4 金日成, 13일까지 10일간 中國방문
10. 5 日政府, 유엔 연설후 귀국하는 延亨默 北韓總理에 정식 입국 허가
10. 7 延亨默 北韓 總理 일행, 日本 정식 입국, 정치활동
- 다나베 사회당 위원장 등과 회담
- 金永南 외교부장, 내년 4월 15일까지 日과 수교희망 표명
韓·美, 호놀룰루에서 연례안보협의 예비실무회의 개최(7일~9일)
- 韓半島 核政策 등 집중 협의
10. 8 中國政府, 경제특구 夏門을 첫 자유무역港으로 지정
江澤民 總書記, 中國·北韓間의 同盟國 관계 부인
- 日 公明黨 이시다위원장과 회담에서 발언
- 10.10 韓國민족민주전선, 黨 창건 46周 축전에서 金正日을 수령으로 호칭
中國政府, 흑룡강省·蘇 접경 3개도시를 經濟개방구로 지정

- － 黑河·纓芬河·萬洲里 등 3도시
- 10.12 몽골, 私有化 법안 제정
- 10.15 캄보디아 4個政派, '93년 3월에 總選 실시 합의
平壤에서 UNDP주관의 두만강 개발논의 關聯國會議 개막
 - － 南北韓, 中國, 몽골, 日本, 蘇聯 참석
- 10.17 필리핀 클라크 美 공군기지, 판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전
- 10.21 中國 共產黨지도부, 국가경제부흥과 정치재교육 내용의 「共產主義 固守戰略」 발표
- 10.22 우크라이나共和國 의회, 獨自軍 창설 승인
 - － 총 40만명 규모로 戰略核도 당분간 유지 결정
 蘇聯政府, 對北韓 우호조약 재검토
 - － '61년 체결된 조약의 군사동맹·상호원조 내용 수정
- 10.23 평양인민문화궁전 개최 제 4차 南北總理會談에서 양측 總理, 새로운 합의안 제시
 - － 南側 核사찰 수용 촉구
 - － 北側 非核地帶化 제의
 - － 불가침·화해·교류에 의견 일치
 韓·베트남 早期修交 합의
 - － 박철언체육, 구엔 칸 베트남 副總理와 회담서 합의
 - － 체육교류협정 정식 조인
 日 민간전세기, 北韓 첫 취항
 - － 140명 태우고 니가타에서 평양항발
- 10.30 美 國務部 솔로몬 차관보, 上院에서 北韓核 개발저지 위한 經濟制裁 추진 발언
蘇聯政府, 작년 9월 韓·蘇修交이후 北韓에 무기공급 중단

－ 對蘇 미상환부채 47억달러 상환요구

11. 1 鄧小平, 金日成 訪中때 ‘北韓 被侵때 派兵’ 약속
 로동신문, 韓國이 美핵우산하에 있는 한 核사찰 허용 거부
11. 2 臺灣, 「中華共同市場」 제의
11. 3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지지 발언
 이스라엘·아랍 중동평화회담, 마드리드에서 雙務會議 개막
11. 4 베트남 무오이 共產黨 서기장·키에트 총리, '77년 이후 처음으로 中國 公式 訪問
 이델다, 美國서 5년 망명생활 마치고 필리핀 귀국
 옐친, 日本에 北方4島 반환 반대 표명
 訪日 김종간 해운부 항만총국장, 내년 경제특구 지정 羅津·先鋒·淸津에의 對日 合作개발 희망
11. 5 日 미야자와 內閣 출범
 피츠워터 백악관 대변인, 부시 訪韓 등 동남아 순방 연기 발표
 中國·베트남 13년만에 復交
11. 6 옐친, 共產黨조직 해체령 發表
 폴란드, 유럽會議 26번째 회원국 가입
11. 7 부시, NATO 頂上會談서 유럽軍 창설 반대 표명
 NATO 16개국, 로마에서 頂上會談 개최(7~8)
 北韓, 사정거리 1,100Km 스커드 D型 미사일 개발
11. 8 盧泰愚 大統領, 韓半島 非核化 선언
 - 核무기 제조·보유 금지, 국제 核협정·査察 준수 강조
 韓·美, 駐韓美軍核 年內 철수 합의

- 核적재 항공기·합정 통과보장 합의
- 베이커 國務, 경제개방·정치민주화·안보 재구축 등 亞太 새
질서 3원칙 제시
- 韓·美, 駐韓美軍核 年內철수 합의
- 11. 9 北韓, 盧대통령의 非核化 제의 거부
- 와타나베 日 外相, 美 요구따라 ASEAN주도의 東亞經濟會議
(EAEC) 불참 표명
- 徐敦信 中國 外交部 부부장, 韓國의 非核化선언 지지
- 11.10 韓國政府, 베이커 美 國務 제시 「2+4」 韓半島문제 해결방법
에 반대 표명
- 中·베트남 頂上, 北京에서 관계정상화 共同聲明 발표
- 美國政府, 北韓 核문제 해결시 大使級협약의 용의 표명
- 11.11 盧泰愚 大統領, 日本의 武力強化에 우려 표명
- 美·캄보디아 復交
- 미야자와 總理, 의회연설에서 自衛隊 海外派兵 역설
- 11.12 蘇·中, 제 5차 국경병력 감축협상 再開
- 錢其琛 中國 외교부장, 史上 첫 來韓
- APEC 서울총회 참석차 訪韓
- 서울서 제 3차 亞太각료회의 개막(12~14)
- 노보질로프 極東軍區 사령관, 극동군 병력 20만으로 절반감축
발언
- 부시, 美아시아협회 연설에서 '韓國이 원할경우 美軍 계속 주
둔' 발언
- 11.13 미야자와 日총리, 의회에서 '自衛隊 해외파병 合憲' 발언
- 11.14 蘇聯國家會議, 新연방조약 합의

- 韓·中 外務, 양국 무역대표부 準公館 승격 합의
- 11.15 蘇聯政府, 共和國 獨自軍 창설 인정
 - 聯邦대통령·統一軍 존속
 - 국가평의회를 국가최고기관으로 인정
 유엔, 재래식무기 輸出入 등록제 결의
- 11.16 러시아共, 호네커 前東獨 서기장 추방결정
- 11.17 中國政府, 내년초 核확산 금지조약가입 베이커 美 國務에
 동의
- 11.18 李鵬 中國 總理, 12월중 '62년 이후 처음으로 印度 방문
 유럽경제지역(EEA) 협정 조인 연기
 베트남, 관계정상화 회담위해 외교사절단 美國에 파견
 日·北韓, 北京서 5차 修交회담 개최(18日~20日)
 소말리아에서 쿠데타 발생
- 11.19 고르바초프, 세바르드나제를 外務長官으로 再起用
- 11.20 李相玉 외무, 한국의 유엔평화활동 참여 발언
 베트남, 經濟特區 특별법 제정
 메이저 영국총리, 의회연설에서 유럽통합 거부 표명
- 11.21 유엔安保理, UN사무총장에 갈리 이집트 부총리 선출
 루마니아 의회, 自由市場制 내용의 민주헌법 승인
 美·베트남, 유엔에서 關係正常化 회담 시작
- 11.22 UNDP, 비무장지대에 국제환경공원 추진
 헝가리·폴란드·체코, EC 準회원 가입(연합통신)
- 11.23 인디아, 南아시아 非核化 반대표명(AP통신)
- 11.24 祖平統 書記局, 盧대통령의 한반도 非核化 선언과 관련 5개항
 의 공개질문장 발표

臺灣政府, 對北韓 직교역 허용

- 11.25 8中全會 개막(25일~29일)
中國當局, 티베트 獨立시위에 발포명령 하달
北韓 外交部, '駐韓美軍 核철수 시작되면 核안전협정 서명' 등
4개항의 聲明 발표
- 11.26 美, 클라크 空軍基地 필리핀에 공식 반환
- 11.27 유엔총회, 北洋 유자망어업 전면금지 결의안 채택
이집트 무바라크·아사드 시리아대통령, 카이로회담서 이라크
침공 방지위해 쿠웨이트 派兵 합의
유엔安保理, 유고에 평화유지군 파견 결의안 채택
- 11.28 中國정부, 日 자위대 과병법안 特委 통과에 우려 표명
토고서 軍事 쿠데타 발생
- 11.29 日, 미야자와 總理 내년 1월 16일 訪韓 발표
- 11.30 文鮮明 목사, 北韓政府 공식초청으로 북한방문
-
12. 2 아사드 시리아대통령, 國民投票 결과 7年 任期 4번째 連任
확정
엘친, 北方 4개섬 반환 반대 표명
12. 3 政府, 새해 豫算 33兆 2千億 확정
UN총회, 사무총장에 갈리 이집트 副總理 공식 임명
12. 4 캄보디아 정부軍·크메르 루주, 泰접경서 전투
알바니아, 연립정부 붕괴
12. 6 文鮮明·金日成 단독 회담
12. 7 蘇聯정부, 對쿠바 원유 禁輸
12. 8 文鮮明·김달현 北韓 부총리, 금강산 合作개발 포함 經濟合意

書 서명

- 회교회의기구(OIC) 外務, 시오니즘 비난 결의문 합의
12. 9 韓國, 國際勞動機構(ILO) 정식가입
EC 財務, '99년 「화폐統一」 合意
中國·印度, 李鵬 訪印계기로 국경무역 재개
UN總會, 회원국 무기수출입 등록제 실시 결의
- 12.10 延亨默 總理 등 北韓 대표단 90명, 제 5 차 南北고위급회담 참
석위해 서울도착(12. 10~12. 13)
EC 정상회담, 유럽통합관련 「聯邦」삭제 합의
부시, 蘇聯에 最惠國지위 부여 法案 서명
- 12.11 EC, 유럽統合 조약안 합의
蘇聯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紙 폐간
- 12.12 蘇聯邦最高會議, 자진해체
訪印 李鵬총리, 라오 印度총리와 긴장해소 3개협정 서명
中國·캄보디아 최고민족회의, 외교관계 수립
- 12.13 제 5 차 南北고위급회담 양측대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명
南·北韓, 내년 2월 18일~21일 平壤에서 제 6 차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
訪中 吳振宇 무력부장, 中國에 재래식무기 현대화 지원 요청
- 12.16 蘇 12개 共和國·美·日 등 35個國, 「유럽 에너지憲章」조인
- 12.17 솔라즈 의원 등 美國 의회 사절단, 平壤도착
獨逸 집권 基民黨, 해외파병 내용의 「드레스덴선언」 승인
고르바초프·엘친, 獨立國共同體 1월 1일 創設 합의
- 12.18 盧대통령 核不在 선언

- 美國정부, 베트남 禁輸조치 완화
- 12.19 金日成, 訪北 아라파트 PLO의장과 회담
臺灣, 極東최대 地下 공군기지 완공
金日成, 訪北 솔라즈 美下院 亞·太소위원장과 의 면담에서 核
개발 否認
- 12.20 文鮮明씨, 金日성과 對北韓 30億달러 투자 합의
UN總會, '92년까지 「유자망 어업금지 결의안」 채택
- 12.21 蘇聯 11개 공화국, 알마아타 정상회담에서 「獨立國 共同體」 공
식 출범
- 고르바초프에 연방 大統領職 소멸 통보
- 12.22 日本政府, 내년 방위비 4조 5천억엔 승인
- 12.23 北韓, 核안전협정서명·査察수용 발표